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지역소득통계의 생산 및 분배계정을 통한 지역소득격차 분석



2011년 2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전공)

최 형 철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지역소득통계의 생산 및 분배계정을 통한 지역소득격차 분석

지도교수 권 오 혁

이 논문을 경제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전공)

최 형 철

최형철의 경제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0년 12월 일



주 심 경제학박사 심 성 훈 

위 원 경제학박사 김 종 호 

위 원 행정학박사 권 오 혁 

〈 목 차 〉

*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제2장 이론적 배경	4
제1절 지역의 기초 개념	4
제2절 지역의 구분과 종류	9
제3절 지역소득과 지역간 소득격차의 측정	15
제4절 지역소득통계의 이해	20
제3장 지역소득 추계 현황	24
제1절 지역내총생산(생산소득)	24
제2절 지역총소득(분배소득)	31
제4장 지역소득 격차 실증분석	42
제1절 지역유형별 분석	42
제2절 불평등척도로 본 지역소득 격차	44
제3절 지역내총생산대비 지역총소득 수준	45
제4절 생산소득과 분배소득의 T-검증	47
제5장 결 론	50
제1절 연구의 요약	50
제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	51
참고 문헌	52
부록 : 시·도별 추계인구 및 구성비	54

〈 표 목 차 〉

〈표 2-1〉 우리나라 행정구역 현황(2009)	9
〈표 2-2〉 지역의 구분	10
〈표 2-3〉 지역의 구분(동태적, 정태적기준)	11
〈표 3-1〉 2008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24
〈표 3-2〉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추이	28
〈표 3-3〉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추이	30
〈표 3-4〉 2008년 시·도별 지역총소득	32
〈표 3-5〉 2008년 시·도별, 제도부문별 지역총소득	33
〈표 3-6〉 시·도별 지역총소득(명목) 추이	36
〈표 3-7〉 시·도별 개인소득 추이	38
〈표 3-8〉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추이	39
〈표 3-9〉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추이	41
〈표 4-1〉 지역유형별 구분	42
〈표 4-2〉 시·도별 경제성장수준 및 소득수준	43
〈표 4-3〉 지역소득별 불평등척도	44
〈표 4-4〉 지역내총생산대비 지역총소득 수준 추이	46
〈표 4-5〉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 상관계수	47
〈표 4-6〉 지역소득 총량 기준의 T-검정 결과	48
〈표 4-7〉 지역소득 1인 기준 T-검정 결과	49
〈표 A-1〉 시·도별 추계인구	54
〈표 A-2〉 시·도별 추계인구 구성비	54

〈 그림 목 차 〉

〈그림 2-1〉 5+2광역경제권	15
〈그림 2-2〉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	18
〈그림 2-3〉 지역계정(생산·지출·분배)지표의 포괄범위	20
〈그림 3-1〉 2008년 지역내총생산 및 산업구조	25
〈그림 3-2〉 2008년 지역내총생산 전년대비 성장률(실질)	26
〈그림 3-3〉 2008년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27
〈그림 3-4〉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2000년대비 성장률 추이	29
〈그림 3-5〉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2000년대비 성장률	31
〈그림 3-6〉 2008년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34
〈그림 3-7〉 2008년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35
〈그림 3-8〉 시·도별 지역총소득 2000년대비 증가율	37
〈그림 3-9〉 시·도별 개인소득 2000년대비 증가율	38
〈그림 3-10〉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2000년대비 증가율	40
〈그림 3-11〉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2000년대비 증가율	41
〈그림 4-1〉 불평등척도별 지역소득 격차 추이	45
〈그림 4-2〉 지역내총생산대비 지역총소득 추이	47

An Analysis of the Regional Income Gap Based o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ccount of Regional Income Statistics

Choe, Hyeong Cheol

Department of Economics(majoring in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re has been no data for Regional Income (RI) regarding distribution for each city and province of Korea in previous studies on the regional income gap. Thus an assumption was made that no significant gap exists between production income and distribution income. As a result,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statistics were used for the Regional Income data.

However, a significant gap might exist between the GRDP and Regional Income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First, not every product within a region accounts for the income of that region. Second, transfer income can occur between the regions. Third, one might work in one region and reside in another. Thus one requires a highly sensitive care to examine the Regional Income gap based on the level of GRDP.

Meanwhile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Korea developed and completed the estimation of the Regional Income distribution account in 2009 in order to be able to examine the Regional Income by the 3 aspects of production, spending and distribution.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and difference between GRDP as a production aspect and the Regional Income as a distribution aspect. As a result,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two a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per capita was above 0.7 and the total amount was above 0.9. Such a result is consistent with overseas cases.

Here, the GRDP of production versus the Regional Income of the distribution was relatively higher in special and metropolitan areas than regional areas. Production income was high in regional areas due to post-urbaniza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ereas distribution income was high in special and metropolitan areas due to the separation of the workplace and residency, generating the gap betwee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come. Furthermore, as a result of the T-test betwee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come,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total amount, where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10% was found in the per capita since 2002. Here, the per capita income is the actual data used in the Regional Income gap analysis, hence confirming the significant gap betwee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come. Consequently, it is suggested to use income data appropriate for the research goal by distinguish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come in accordance with future studies on regional economy or income.

Keywords : Regional Income, Regional Gross Domestic Product, Production Income, Distribution Incom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그 동안 지역소득 격차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시·도별 분배측면의 지역소득(Regional Income)에 관한 자료가 없어 생산측면의 지역소득인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의 통계를 지역소득 자료로 이용해 왔다. 이는 생산측면의 소득과 분배측면의 소득 간에는 차이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은 지역이 좁고 한 지역의 주거지로부터 다른 지역의 직장으로의 통근량이 적고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소득의 상관관계가 대단히 높고 더구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외국의 연구에서 밝혀진 점이다.¹⁾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내총생산이 지역소득을 근사하게 대표해줄 것이라고 가정하여 지역소득에 관한 연구에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전부 그 지역의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지역간 이전소득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지역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소득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역내총생산수준의 차이로서 지역소득격차를 보려 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폐쇄경제체제하에서는 생산소득(Produced income)과 분배소득(Distributed income)이 일치할 것이지만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그 차이는 경제의 개방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생산요소들은 사용되는 곳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며 직주(職住)의 분리는 이러한 차이를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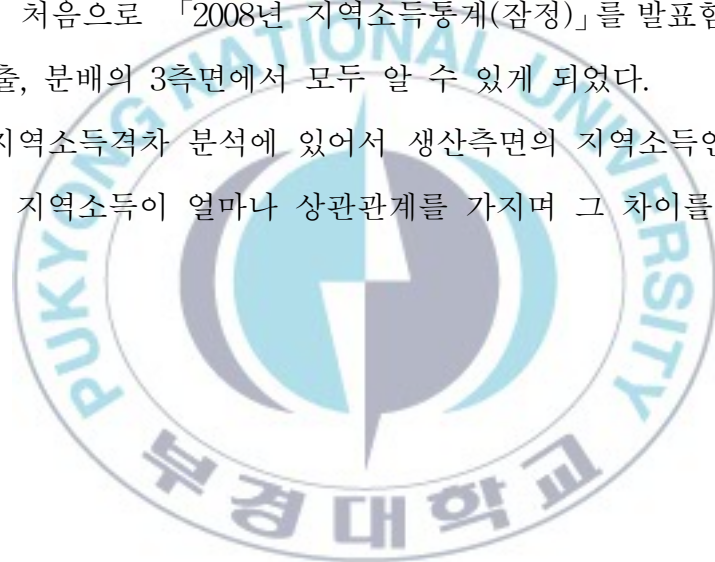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도 도시화 과정에서 제조업의 탈도시화로 인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역출퇴근 현상이 늘고 있어 직주의 분리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1) 캐나다의 연구결과에서 생산측면의 소득(1인당 총 부가가치)과 분배측면의 소득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소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서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의 생산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지역내총생산으로 각각 잡힐 것이며, 그들이 받는 소득은 그들의 주거지인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지역소득에 계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소득의 통계가 없이 지역내총생산만 가지고 지역소득격차를 판단할 때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지역소득이 사실보다 낮게 평가되고 반대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소득은 과대평가되기 쉬웠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 통계청은 지역소득 분배계정 추계를 개발·완성하여 2009년 12월에 처음으로 「2008년 지역소득통계(잠정)」를 발표함으로써 지역소득을 생산, 지출, 분배의 3측면에서 모두 알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소득격차 분석에 있어서 생산측면의 지역소득인 지역내총생산과 분배측면의 지역소득이 얼마나 상관관계를 가지며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지역소득 격차 계수 측정에 생산소득(지역내총생산)과 분배소득(지역총소득)의 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위해 지난 2010년 7월 공표한 「2008년 지역소득통계(Regional Income Statistics)」 확정자료와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시계열자료²⁾를 이용해서 2008년 지역소득현황과 2000년-2008년 지역소득 추이를 시·도별 행정구역 지역단위로 지역별 소득 차이를 생산소득과 분배소득별로 그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소득 격차 계수로 지니계수와 변이계수를 각각 측정하여 상호 비교 분석하고 그 상관관계를 상관분석 및 T-검정을 통해 알아본다.

이에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등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 지역소득 격차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지역소득 격차를 시·도별로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의 현황을 통해 그 차이를 알아본 뒤 제4장에서는 2000년 이후 지역내총생산(생산소득)과 지역총소득(분배소득)을 이용해서 지역유형³⁾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지역소득 격차 계수인 지니계수와 변동계수를 측정하여 차이와 상관관계 정도를 검정하여 제5장에서 논문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2)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지역소득」.

3) 클라센(L. Klaassen)의 동질지역의 네가지 유형 : 번성지역(prosperous region), 발전도상 저개발지역(underdeveloped region in expansion), 잠재적 저개발지역(potentially underdeveloped region), 저개발지역(underdeveloped region).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지역의 기초 개념

1. 지역의 정의

지역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범위를 정하는냐는 지역정책이나 계획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곤혹스러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역이란 정책적, 학문적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적 범역과 형태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지역경제학자나 지역계획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대담보다는 자료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행정구역을 지역과 동일시하는데 만족하고 있다.

지역(region)이란 용어는 통일적인 정의보다는 학문적 분야와 관심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있다. 국제경제학에서 지역이란 용어는 세계화된 경제체제의 하위단위를 의미하므로 공간적으로 몇 개의 국가가 포함될 정도로 넓고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동북아시아, 태평양 연안국들간의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지역은 초국가적 영역의 공간단위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발전 및 계획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지역이란 용어는 국가의 하위 공간단위를 의미한다. Richardson(1979)은 지역을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성된 국가의 하위 공간단위(sub-national spatial unit)로, Glasson(1974)은 전국과 최하위 공간단위 사이에 존재하는 지리적으로 연결되고 연대성을 지닌 중간계층 수준의 공간단위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간계층이나 기능적 차원에서 지역을 개념화하는 학자들과는 달리 Markusen(1985)은 지역을 “독특한 물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영토적 단위”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20년대 미국의 지역주의는 역사적 정체성을 지닌 공동운명적 공간단위로서 문화적 공동체를 의미하였다.

한편, Czamanski(1973)는 지역을 장소, 지구,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장소(area)는 공간적 경제분석에 유용한 개념으로서 2차원적 공간의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로, 제품의 지리적 판매범위인 시장권을 나타낸다. 지구(zone)는 지리적 영역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술적인 용어로서 주변지역과 상이한 성격을 가진 장소를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지역(region)은 국가경제 내에 존재하는 광역적 하위 공간단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비판지리학자인 Massey(1978)는 지역을 이미 정태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고, 지역을 생산 및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역은 직관적 혹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특정목적에 위한 분석결과에 따라 다르게 개념 지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지역의 속성

지역의 개념정의는 다양하고 모호하여 아직도 합의가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간계획 분야에 있어서 지역은 최소한 세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가의 하위 공간단위로서 중간계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역은 최하위 공간단위가 두 개 이상 모인 공간단위를 의미한다. Kuklinski(1975)는 지역발전을 국가 하위 수준, 초지방(super-local) 수준의 활동으로 보고 있다. 둘째, 지역 내 여러 공간단위들은 공통의 특성을 지니거나 상호보완적이고 밀접한 기능적 연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셋째, 공간단위간의 지리적 연속성이 요구된다. 지리적 연속성이란 반드시 육로의 연결을 의미하기보다는 중간에 상이한 공간단위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Siebert(1969)는 공간의 중간계층성을, Perloff는 지리적 연속성을 지역형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Perloff, Dunn, Lampard, Muth는 지역을 “공통적이고 보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밀접한 상호작용의 흐름

으로 묶여 있는 지리적으로 연속된 공간의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지역개념

1) 공간적 범역과 지역

우리나라의 지역계획 등 공간정책에서 지역이란 용어는 도시와 대칭되는 일정한 지리적인 범역(area)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2개 이상의 하위 공간단위가 포함된 서구적인 개념의 중간계층적인 공간단위인 지역(region)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책 또는 지역계획에서 ‘지역’이란 용어는 중간계층적 공간보다는 비도시지역이라는 공간특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계획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특정지역 개발계획, 도·군 종합개발계획, 각종 개별법에 의한 광역권 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오지 개발계획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공간계획 이론과는 달리 지역이라는 용어를 비도시지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공간단위를 포함한 하위 국가단위인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 통합지역에 대한 계획은 일반적으로 지역계획으로 지칭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간계획 분야에서 ‘지역’이라는 용어에 대한 혼란이 초래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사전적인 의미에서 볼 때, 서구의 지역(region)개념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역사적·문화적·경제적·사회적 동질성을 지닌 사람들이 사는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이나 “공간체계상 중간계층으로 복수의 기초 공간단위를 포함한 광역적 공간단위”를 지칭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땅의 구역”, “구획된 토지” 또는 “땅의 경계” 등 일정한 지리적 범역(area)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영어문화권에서는 보통 가장 기초적인 공간단위를 ‘local’로 ‘local’보다는 크지만 국가보다는 작은 공간단위를 ‘region’이라고 지칭한다. 따라서 ‘local’, ‘region’, 국가의 순으로 공간규모가 커지게 된다. 그렇

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은 가장 기초적 공간단위(local)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이보다 큰 광역적 공간단위(region)를 의미할 수도 있어서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공간계획 제도에서 ‘지역’이라는 용어는 비도시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간계획의 대상으로만 사용된 데도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계획이란 수도권 정비계획, 광역권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도·군 종합개발계획 및 농어촌 개발계획, 오지 개발계획 등을 의미하며, 광역적 차원의 도시계획은 지역계획으로 부르지 않는다. 특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양분된 공간계획체계를 통합한 「국토기본법」의 경우에도 ‘지역계획’을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을 일정한 지리적 공간범역(area)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 및 공간계획 차원에서 ‘지역’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 이것이 단순히 일정한 지리적인 범역(area)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중간계층적인 공간단위로 광범위한 지역(region)을 의미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적인 공간계획 단위는 ‘향촌’ 또는 ‘지방(local)’으로, 국가 하위의 중간계층적 공간단위는 ‘광역’ 또는 ‘지역(region)’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향촌은 “시골이나 시골마을 등 소규모 지역사회”를 의미하며, 지방은 “행정구역이나 어떤 표징으로 나누어진 땅”을 의미한다. 특히 지방이란 용어는 “특수한 공간형태와 위치적 속성을 지닌 지리적 영역” 또는 “기초적 수요를 충족하는 제한된 지리적 영역”, “지역사회” 또는 “소단위의 행정·정치구역” 등 공간계획에서 말하는 기초적 공간단위(local)의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용어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기초적 공간단위로 볼 수 있는 시급도시나 소규모 농촌단위 계획은 ‘지방계획(local plan)’으로, 그리고 2개 이상의 시급도시, 소도읍과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에 대한 공간계획은 지역계획(regional plan)으로 지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계획의 공간

단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행정구역과 지역개념

지역의 개념은 종종 행정구역 차원에서 이해되고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단위는 최하위에 읍·면·동이 있고, 차상위에 시·군·구 자치구가 있으며, 최상위에 광역시와 도가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을 설정한다면 최하위 공간단위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지역의 범위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시·군(구)을 최하위 공간단위로 보는 경우, 2개 이상의 시·군(구)과 광역시 및 도의 행정구역을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하위 독립적 공간단위는 일일 생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또는 최하위 정치단위의 공간범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광역시 내 자치구를 최하위 공간단위로 간주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 둘째, 읍·면·동을 최하위 공간단위로 보는 경우, 시·군(구)과 그 이상의 공간적 범위를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읍·면·동을 모두 최하위 공간단위로 볼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도시 내 동(洞)은 역사성이나 지리적 특성보다 행정관리 차원에서 구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市)를 지역(region)으로 보는 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읍(邑)과 면(面)은 최하위 정치단위로 볼 수 있다. 군(郡)이나 최근의 도농통합시의 경우 공간구성상 중심부인 시가화된 읍과 주변부인 농촌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리적 범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으로 보는 것이 이론적인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1〉 우리나라 행정구역 현황(2009년)

광역시·도	시·군·구(개)	읍·면·동(개)	주민등록인구(명)	면적(km ²)
서울특별시	25	436	10,208,302	605
부산광역시	16	217	3,543,030	766
대구광역시	8	143	2,489,781	884
인천광역시	10	140	2,710,579	1,027
광주광역시	5	91	1,433,640	501
대전광역시	5	76	1,484,180	540
울산광역시	5	58	1,114,866	1,058
경기도	30	534	11,460,610	10,136
강원도	18	187	1,512,870	16,613
충청북도	14	154	1,527,478	7,433
충청남도	18	211	2,037,582	8,629
전라북도	17	241	1,854,508	8,061
전라남도	22	292	1,913,004	12,233
경상북도	25	333	2,669,876	19,029
경상남도	20	320	3,250,176	10,532
제주도	2	43	562,663	1,849
합 계	240	3,476	49,773,145	99,89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제2절 지역의 구분과 종류

1. 지역의 구분

국토를 몇 개의 지역 또는 권역⁴⁾으로 어떻게 쪼개느냐는 구분의 목적과 구분에 사용될 기준에 따라 다르다. 구분의 목적이 다양하듯이 구분에 사용되는 기준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상이한 기준을 적용할 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체로 사용되는 기준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동질성(homogeneity)의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의존성(interdependency)의 기준이다. 힐호스트(Hilhorst)는 지역의 구분을 동질성과 의존성이란 두가지 기

4) region이란 용어는 흔히 지역으로 번역되지만 때로는 권역으로 번역되기도 하며 planning region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계획권역으로 통용된다.

준과 분석 및 계획이란 구분의 목적에 따라 분극지역(polarized region), 동질 지역(homogeneous area), 계획권역(planning region), 사업지역(program area)의 넷으로 그 유형을 나누는데 비하여 보더빌(Boudeville)은 동질지역, 분극지역, 계획권역의 셋으로 구분한다.

〈표 2-2〉 지역의 구분

목 적 기 준	분 석	계 획
의 존 성 (interdependency)	분 극 지 역 (polarized region)	계 획 권 역 (planning region)
동 질 성 (similarity)	동 질 지 역 (homogeneous area)	사 업 지 역 (program area)

출처 : 황명찬, 「지역개발론」 p.5.

2. 지역의 종류

1) 동질지역

지리적 특성, 경제사회적 특성 등과 같은 어떤 공통적 특성에 따라 몇 개의 공간단위(spatial unit)⁵⁾를 하나로 묶을 때 이를 동질지역이라 부른다.

산업구조, 소비패턴, 직업분포, 지형, 기후, 사회적 태도, 1인당소득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이 동질지역의 확정에 사용되지만 그 결과로 얻어진 지역이 과연 엄격한 의미에서 동질지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주의하여야한다. 동질지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요한 기준의 관점에서 볼 때 동질적이라는 것이다. 구분의 기술상 여러 가지 특성을 다 종합적으로 사용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농업지역, 광산지역, 중공업 지역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질지역간에는 여러 가지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다.

클라센(L. Klaassen)은 ① 지역의 1인당 소득수준과 국가전체의 소득수준의 비(比) ② 지역경제의 성장률과 국가경제의 성장률의 비(比)의 고저에 따

5) 국토의 공간단위로는 행정구역이나 기타 인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구역이나 필지를 무시하고 전국토를 1㎢간격으로 인위적으로 쪼갠 후 이를 공간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다.

라서 번성지역(prosperous region), 발전도상 저개발지역(underdeveloped region in expansion), 잠재적 저개발지역(potentially underdeveloped region), 저개발지역(underdeveloped region)의 넷으로 동질지역을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정태적 기준과 동태적 기준의 두 가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지역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처방을 함에 있어 유익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3〉 지역의 구분(동태적, 정태적기준)

동태적 기준 정태적 기준		지역소득(y_i) 대 전국소득(y)	
		고(>1)	저(<1)
지역성장률(g_i) 대 국가성장률(g)	고(>1)	번 성 지 역 (prosperous region)	발전도상저개발지역 (underdeveloped region in expansion)
	저(<1)	잠재적저개발지역 (potentially underdeveloped region)	저 개 발 지 역 (underdeveloped region)

출처 : 황명찬, 「지역개발론」 p.6.

한센(N. Hansen)은 ① 직접생산활동, ② 경제적 간접자본, ③ 사회간접자본의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과밀지역(congested regions), 중간지역(inter-mediate region), 그리고 낙후지역(lagging regions)의 셋으로 구분한 바 있다. 과밀지역이란 한계사회비용이 한계사회편익보다 큰 지역을 말하고, 중간지역은 반대로 한계비용이 한계편익보다 작은 지역을 말하며, 낙후지역은 소규모 농업과 침체산업이 지배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흡인(吸引)할 수 있는 입지매력이 거의 없는 지역을 각각 가리킨다.

2) 결절(結節)지역

결절지역(noda region) 또는 분극지역(polarized region)이란 상호의존적 ·

보완적 관계를 가진 몇 개의 공간단위를 하나로 묶은 지역을 가리킨다. 하나의 지역으로서 최대한의 자족성(self-sufficiency)을 갖게끔 밀접한 기능적 의존관계가 있는 공간단위의 집합체이므로 지역내의 공간단위간의 의존관계는 타지역과의 그것보다 더 크게 된다.

이러한 지역은 서로 이질적이나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공간단위로 구성되며 구성공간단위간의 기능적 분화를 전제로 한다. 지역 내의 경제활동이나 인구의 분포는 획일적이라기보다 어떤 특정 공간단위에 집중되어 있음이 보통인 바 다른 공간단위에 비하여 활동이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공간단위를 흔히 결절(nodes) 또는 분극(foci)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극지역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흐름은 물론 정치적·문화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 흐름이나 관계의 지배적인 방향이 그 지역을 지배하는 거점(pole) 또는 중심지점으로 향함이 보통이다. 결절지역은 ① 지역 내의 기능적 관계(intra-regional functional interconnections), ② 계층구조(hierarchical structure)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지역 내의 주변공간단위와 중심지점간의 기능적 관계의 대부분은 인구의 이동, 출퇴근, 상품이나 서비스의 흐름, 전화 같은 정보의 흐름 등 여러 가지 흐름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흐름은 불규칙적이라기보다는 규칙적이다. 이러한 흐름은 주변공간단위로부터 중심지점으로 향함이 지배적이며 이 지배적인 흐름의 관계를 통하여 지역내의 계층적 공간질서가 출현하게 된다.

한 결절지역 내에 몇 개의 중심지점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들 사이의 흐름의 지배관계를 통하여 계서(階序)가 형성됨은 물론이다. 레일리(W.J.Reilly)의 법칙에 따르면 두 중심지점간의 흐름은 그 중심지점의 크기에 정비례하고 그 지점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t_{ij} = C \cdot \frac{m_i m_j}{d_{ij}}$$

m_i, m_j : 중심지점 i 와 j 의 규모

d_{ij} : 두 지점 i 와 j 간의 시간거리

t_{ij} : 두 지점간 흐름의 양

그리고 두 중심지점의 시장 또는 영향권의 경계는 다음 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frac{m_i}{m_j} = \frac{(db_i)^2}{(db_j)^2}$$

db_i, db_j : 중심지점 i 와 j 로부터 경계선상의 점에 이르는 거리

미국의 표준대도시통계지역(SMSA: 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은 미국연방정부에서 센서스나 기타 통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지역으로서 일종의 분극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대도시통계지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심도시와 그 중심도시에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퇴근자를 갖는 주변 군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노동시장(labor market)이라는 관점에서 획정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3) 계획권역

계획권역(planning region)이란 고용 또는 소득의 극대화나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어떤 목적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달성케 하는 연속적 공간으로 계획의 필요에 따라 설정된 지역을 가리킨다. 공간단위간의 기능적 연계를 무시하고 계획권역을 설정하였다면 계획의 집행에 비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유대가 깊고 특히 어떤 중심지와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의존관계가 존재하는

범역(犯域)을 묶어 하나의 계획권역으로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계획권역은 결절지역 또는 분극지역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필요에 따라 비결절지역이 계획권역설정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계획권역의 예로는 ‘베네수엘라’의 지역개발계획에 프리드먼(J. Friedmann)이 사용했던 중핵지역(core region), 상향적 과도지역(area of upward transition), 하향적 과도지역(area of downward transition), 자원변경지역(resource frontier), 특수문제지역(area of special problem)의 다섯 가지 계획권역과 우리나라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사용한 수도권, 태백권, 충청권, 전주권,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 제주권 등 8개의 계획권과 현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에서 사용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권(강원도), 제주권(제주도)의 5+2광역경제권을 들 수 있다.

계획은 정책의 결정이나 계획집행의 주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획의 효율성을 위하여 흔히 행정구역과 계획권역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오랜 역사적 관성(慣性) 때문에 사실상사의 경제사회적 권역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할 때는 이 또한 계획의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다. 여기에 계획권역설정의 어려움이 있다.

〈그림 2-1〉 5+2광역경제권



제3절 지역소득과 지역간 소득격차의 측정

1.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소득

지역에 관하여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할 때 그 지역의 인구, 고용, 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사용된다. 그러나 한 지역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또는 생산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가, 지역의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등 지역경제의 성과(performance)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총생산과 소득에 관한 측

정이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과 지역소득(Regional income)과 같은 경제지표가 대단히 중요시된다. 지역내총생산은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1년간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총생산액을 가리킨다. 지역내총생산은 ① 생산요소의 소유자인 지역주민에 귀속되는 여러 산업에 의한 부가가치(value-added)의 총화, ② 가계 및 정부에 의한 소비, 자본형성 및 수출에 할당된 지출 또는 생산액의 총화, ③ 생산요소의 소유자에 귀속되는 소득에 간접세를 더하고 보조금을 뺀 총화의 세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든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소득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내순생산(net regional domestic product: NRDP) = GRDP-감가상각
 지역주민소득(regional income of residents: RI) = NRDP + (지역외 출근자 임금 - 지역내에서 일하는 타지역 근로자의 임금) + (외부로부터의 이자, 지대, 배당소득 및 이윤의 순수령액) + (외부로부터의 기타 순이전소득) - (지역외 정부에 대한 간접세)
 주민개인소득(personal income of residents: PI) = RI + 지역의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 - 법인소득세 - 법인보유이윤 - 사회보험지불
 가처분주민소득(disposable personal income of residents) = PI - 개인소득세

지역내총생산과 소득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있어 지역경제가 국가경제에 비하여 보다 개방적이라는 점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다. 지역과 지역간은 국가간보다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더욱 빈번하다. 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일하거나 다른 지역에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대기업의 보유이윤이나 감가상각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지역수준에서는 생산된 소득(income produced)과 분배소득(income Distributed)의 차이가 그 개방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레벤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일리노이주 엘진-던디지역의 1956년 지역내총생산은 1억 3,659만 달러였는데 비하여 지역주민소득은 1억 5,181만 달러였다.

2. 지역간 소득격차

지역간 소득격차는 일반적으로 개인간 또는 계층간의 소득격차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정치·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우려의 대상이 된다.

지역간 평균소득의 차이보다 한 지역 내의 개인간 소득의 차이가 더 큰 것이 보통인 바, 지역내 소득균등화가 지역간 소득격차의 해소보다 더 유익하고 바람직스러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역소득이 낮은 지역의 주민이 소득격차의 사실을 알고 문제시하는 경우에 이것은 정부나 국민이 도외시킬 수 없는 사회정책적 문제가 된다. 이러한 소득격차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여러 가지 이유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간 소득격차가 오래 지속되면 지역간 위화감 내지 단절감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분리독립(secession)을 위한 정치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지역간 소득격차는 생산자원의 잘못된 배분(misallocation of productive resources)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후이기도 하다. 지역간 소득격차는 곧 지역간 노임과 자본이윤의 차이를 의미하는 바 이러한 현상은 곧 “자원의 이상적인 지리적 분포”로부터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상적 상태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곧 사회적 생산의 어떤 손실이 있음을 가리킨다.

만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A지역의 근로자가 B지역의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높은 임금을 주는 B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사회 전체의 생산을 증대시킬 것이며 이것은 자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과 자본 그리고 자연자원이 서로 배합이 잘 안 되어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들의 재배치는 사회 전체로 볼 때 경제적인 이득이 된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양의 국민소득이 지역간에 균등히 배분된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사회 전체의 복지가 더 증진된다고 한다. 그것은 소득이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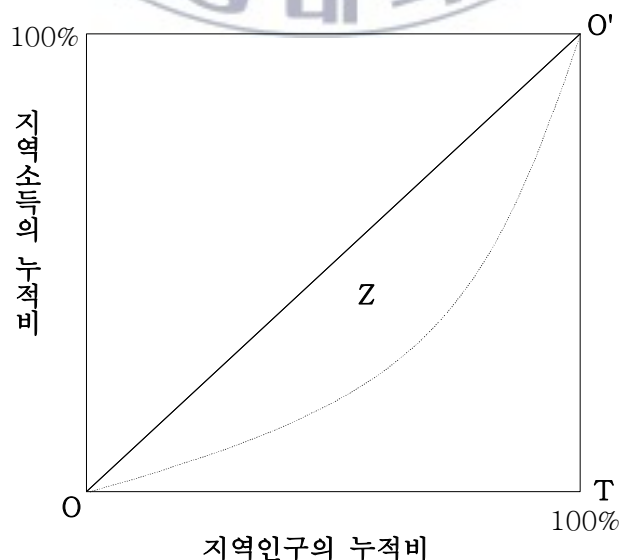
지역의 소득감소로 인한 당해지역주민의 복지의 감소보다 저소득 지역이 얻는 복지의 증가가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3. 지역소득 격차의 측정

국민소득의 소득계층간 배분도 문제이지만 이의 지역간 분포도 대단히 중요한 정책문제가 된다. 지역격차는 일반적으로 1인당 지역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며 이러한 격차를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와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가 있다.

지니계수는 로렌즈곡선(Lorenz curve)의 45도 이하의 면적에 대한 불균등면적의 비로서 표시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의 서울시와 9개도의 인구와 소득의 구성비를 인구규모가 적은 지역부터 각각 횡축과 종축에 누적비율로 표시하면 그림과 같은 곡선이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니계수는 삼각형 OO'T에 대한 반달형의 면적 Z의 비율(즉, $Z/OO'T$)로서, 지역간 소득이 완전히 균등하게 배분되었다면 지니계수는 0이 되고 완전한 불균등상태라면 1이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지니계수와 로렌즈 곡선



$$G = 1 - \sum_{i=1}^n (B_i - A_i)(C_i + D_i)$$

G : 지니계수

A_i : 지역인구의 누적비율

B_i : 차상위지역까지의 인구누적비율($B_i > A_i$)

C_i : 지역소득의 누적비율

D_i : 차상위지역까지의 소득누적비율

n : 지역의 수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산술평균으로 나눈 값으로서 윌리엄슨(J. G. Williamson)의 연구를 비롯하여 지역소득격차의 연구에 자주 사용되어 왔다. 특히 윌리엄슨은 단순한 변이계수를 사용하지 않고 지역의 인구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한 가중변이계수를 사용하였다. 이들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CV = \frac{\sqrt{\sum (y_i - \bar{y})^2 / n}}{\bar{y}}$$

$$CV_w = \frac{\sqrt{\sum (y_i - \bar{y})^2 n_i / n}}{\bar{y}}$$

CV : 변이계수

CV_w : 가중변이계수

y_i : i 지역의 1인당 지역소득

$\bar{y}$: 1인당 평균국민소득

n_i : i 지역의 인구

n : 국가의 총인구

이상과 같은 지역격차의 측정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측정방법의 선택은 연구나 분석의 목적에 따라 결정될 성질의 것이며 각 방법의 선택은 연구나 분석의 목적에 따라 결정될 성질의 것이며 각 방법은 그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측정방법에 따라 상이한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지역소득통계의 이해

1. 지역소득통계의 개요

지역소득통계는 지역소득의 생산·분배·지출 각 측면이나 경제주체간 소득 순환을 파악하여, 지역경제의 실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주어 지역의 재정·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국민경제상의 지역(시·도)경제의 위치를 알게 하고, 지역경제 상호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역적 분석과 지역개발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있다.

지역소득통계는 국민소득통계와 마찬가지로 UN이 권고하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 SNA)의 개념 및 체계에 따라 생산·분배·지출측면에서 각각 추계한 가공 통계이다. 생산계정은 생산측면으로서 해당 시·도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나 생산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며, 분배계정은 각 생산에 참여한 경제주체에 어떻게 배분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한편 지출계정은 지출측면에서 해당 시·도에서 소비 및 투자에 얼마나 지출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그림 2-3〉 지역계정(생산·지출·분배)지표의 포괄범위

① 산출액	지 역 내 총 생 산 (GRDP)				중간 소비
② 지역내 총생산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세	고정자본 소모	
③ 지역민 총소득	지역외로부터의 순취취본원소득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세	고정자본 소모
④ 지역내 총지출	민간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 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순이출 (이출-이입)	

출처 : 통계청, 「2008년 지역소득통계」 지역소득 개요.

우리나라의 지역소득통계의 작성연혁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걸쳐 당시 경제조정기구인 OEC와 한국은행 등이 관심을 갖고 처음 추진하였으나 기초자료의 미비로 완성을 보지 못하다가 1960년대 중반에 들어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는 서울시를 제외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주민소득』이란 이름으로 지역내총생산을 추계하여 1978년까지 공표하였으나 추계의 정확도 문제로 인해 공표를 중단하고 1979년부터는 내부자료로만 이용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내무부와는 별도로 KDI,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1973년부터 1987년까지 『서울시 생산 및 시민분배소득』을 추계하였다. 그러나 이들 양 기관에 의해 작성된 지역소득통계는 추계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추계결과의 비교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정도문제로 이용도가 낮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정도 높은 지역소득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소득통계의 개발에 착수하여 수많은 기초통계의 정비, 개선 및 개발과 지역소득의 추계시산 작업을 거친 끝에 1993년 5월 명실상부한 지역소득통계라 할 수 있는 『지역내총생산(1985~1991)』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매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을 공표해 오고 있으며 1994년에는 기준년도를 1990년으로, 1999년에는 1995년으로, 2004년에는 2000년으로 개편하였으며, 2009년에는 2005년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지역내총생산 자료로는 지역의 생산구조 파악이 가능하나, 생산소득에 대한 소비·투자구조와 물류의 흐름 파악이 불가능하여 지역의 경제구조 분석에 한계가 있고, 지역소득통계 이용자들이 생산소득자료 이외에도 소비, 투자 등 지출측면의 다각적인 지역소득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심층분석을 위하여 1997년부터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작성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1년 7월에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1995~1999)』을 공표하였고, 2004년에는 기준년도를 2000년으로 개편하였으며, 2009년에는 2005년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소득분배 계정을 공표하였다.

2. 지역소득통계 추계방법

1) 생산계정

생산계정은 지역별 산업구조와 변화, 산업의 성장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라 다양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지역별로 1년 동안의 생산측면을 측정하여 계량화하였으며, 이를 표준산업분류를 토대로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등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당해년가격에 의한 산출액 추계는 기초자료 사정에 따라 생산량에 당해년 가격을 곱하거나, 매출액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거나 산출액에 특별조사 또는 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기준년가격에 의한 산출액 추계는 기초자료 및 업종성격에 따라 당해년 물량에 기준년 단가를 곱하거나 당해년 산출액을 관련 가격지수로 환가하여 구한다. 또한, 기준년 산출액을 물량지수로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기준년가격에 의한 부가가치는 기준년가격 산출액에서 기준년가격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하거나 기준년 부가가치율을 기준년가격 산출액에 곱하여 추계한다.

2) 지출계정

지출계정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분되는가를 나타내는 계정으로서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재화와 서비스의 순이출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최종소비지출은 국민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지출로서 가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정부부문으로 나누어 추계하며, 총자본형성은 기업이 생산을 위해 유보하는 투자지출로서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감부문으로 나누어 추계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순이출은 국외 또는 국

내 지역외의 순이출(이출-이입)을 재화와 서비스부문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3) 분배계정

국민계정체계는 두 가지의 거래주체분류가 이용되는데 생산, 소비지출, 자본형성 등 재화와 서비스 관련활동은 경제활동별 분류를 이용하며, 소득의 취득 및 처분, 자금조달 및 운용 등 소득과 자금 관련활동은 제도부문별 분류를 이용한다. 소득분배계정은 각 거래주체간 소득의 수취, 이전 및 지급을 나타내는 계정으로 제도부문별 분류를 이용하는데, 주로 자금면의 역할이나 활동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 법인기업, 일반정부, 개인(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포함)등 4개의 제도부문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소득계정은 생산계정에서 도출된 부가가치가 각 제도단위 및 제도부문의 소득으로 어떻게 분배되며 사용되는 지를 나타내는 계정이며 제1차(본원), 제2차, 제3차(현물) 분배계정과 소득사용계정으로 구성되며 현재 지역계정에서는 제1차, 제2차 분배계정만 작성되고 있다.

본원소득 분배계정은 본원소득을 발생시키는 생산자에 대해서 편제한 것이 아니라 본원소득의 수혜자인 거주자 제도단위 또는 제도부문에 대해서 편제한 것으로 이는 한 제도단위 또는 제도부문이 수취한 본원소득 총액에서 지급한 본원소득 총액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된다.

제2차 소득분배계정은 소득분배의 두 번째 단계를 나타내는 계정으로로서 각 제도단위 또는 제도부문이 지급 또는 수취하는 모든 경상이전(사회적현물이전제외)을 기록함으로써 제1차 분배계정의 본원소득 잔액에서 가처분소득이 산출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경상이전에는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사회부담금 및 사회수혜금, 기타 경상이전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가처분소득은 제2차 소득분배계정의 균형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가처분소득} = \text{본원소득잔액} + \text{수취 경상이전 총액(사회적현물이전 제외)} - \text{지급 경상이전 총액(사회적현물이전 제외)}$$

제3장 지역소득 추계 현황

제1절 지역내총생산(생산소득)

1. 2008년 지역내총생산

통계청에서 2010년 7월 발표한 「2008년 지역소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08년 시·도 전체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1,029조원 규모를 보였다.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서울이 248조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기 199조원, 경남 74조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은 전국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 규모가 가장 작게 나타난 지역은 대전 23조원, 광주 22조원, 제주 9조원으로 전국의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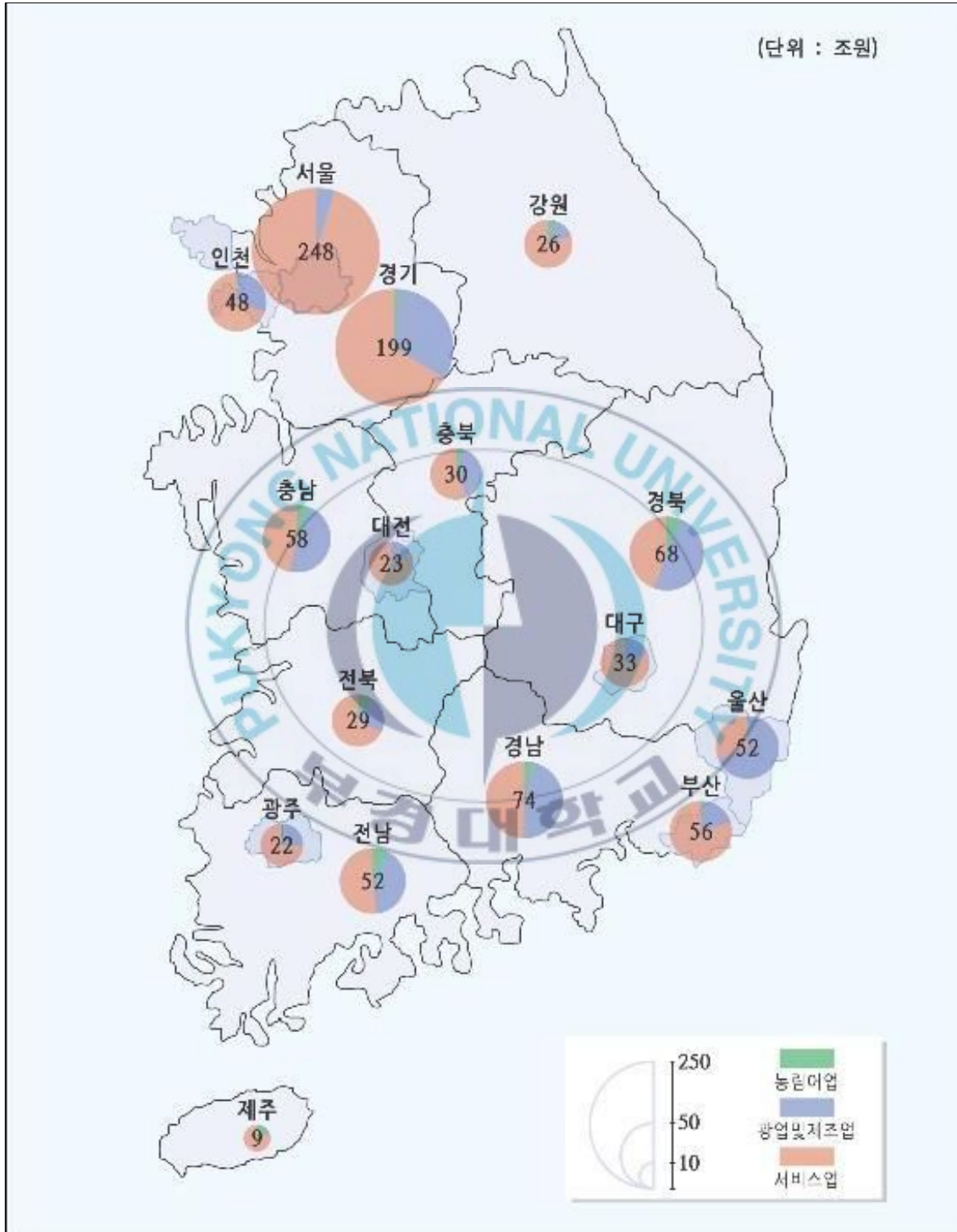
〈표 3-1〉 2008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단위: 10억원, %)

	지역내총생산 (GRDP)	지역내총생산 구성				지역 비중	성장률 (실질)	순위
		농림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서울	248,383.2	0.2	5.0	4.3	90.5	24.2	3.0	1
부산	56,182.3	0.9	20.9	6.9	71.3	5.5	1.0	6
대구	32,714.3	0.5	20.1	8.1	71.4	3.2	1.5	10
인천	47,827.3	0.6	31.8	8.6	59.0	4.7	1.7	9
광주	21,745.3	0.9	25.1	7.7	66.3	2.1	-0.6	15
대전	23,218.1	0.2	16.7	6.0	77.2	2.3	1.5	14
울산	52,408.2	0.3	69.5	5.5	24.7	5.1	0.2	7
경기	198,948.4	1.4	33.5	8.4	56.6	19.3	4.0	2
강원	26,310.6	5.2	15.7	10.5	68.6	2.6	0.9	13
충북	30,104.8	4.8	39.2	8.1	47.9	2.9	2.0	11
충남	57,974.0	6.3	49.4	9.3	34.9	5.6	6.2	5
전북	29,471.3	9.1	24.9	9.8	56.1	2.9	1.1	12
전남	52,387.3	7.6	44.2	8.7	39.5	5.1	3.0	8
경북	67,712.0	5.9	53.0	6.5	34.6	6.6	0.7	4
경남	74,280.3	4.4	47.3	7.1	41.2	7.2	5.7	3
제주	8,833.0	17.6	4.1	8.0	70.3	0.9	-3.4	1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그림 3-1〉 2008년 지역내총생산 및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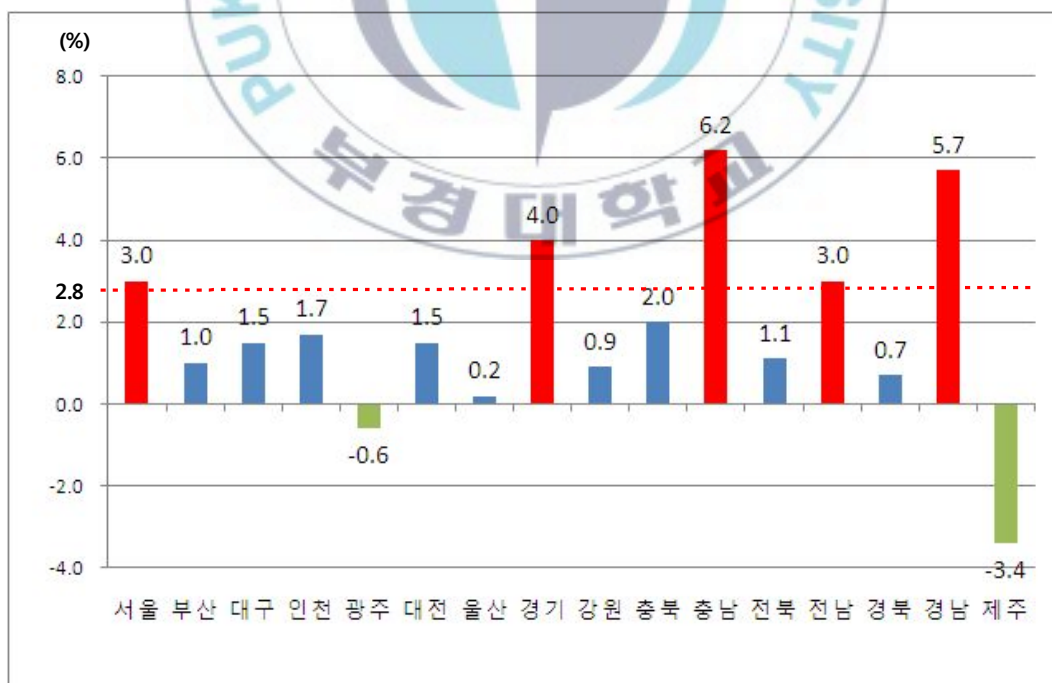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08년 지역소득통계」 (2010.7.).

시·도의 지역내총생산의 경제활동별(산업별) 구조를 보면(표 3-1)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전체 지역내총생산중 90.5%를 차지하고 있고 대전이 77.2%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광·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공업도시인 울산으로 69.5%를 차지하였고 경북이 53.0%, 경남 47.3% 순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17.6%이었으며 건설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10.5%인 강원이었다.

2008년 지역내총생산 전년대비 실질성장률(그림 3-2)은 충남이 6.2%로 가장 높았고 전국의 실질성장률(2.8%)보다 높은 곳은 충남, 경남, 경기, 서울 4개 지역으로 충남은 반도체산업, 경남은 선박산업의 호조로 성장률이 높았다. 전국 실질성장률보다 낮은 곳은 충북, 인천, 대구, 대전 전북, 부산, 경북, 울산이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지역인 제주는 농림어업과 건설업의 부진, 광주운수업의 부진에서 기인한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그림 3-2〉 2008년 지역내총생산 전년대비 성장률(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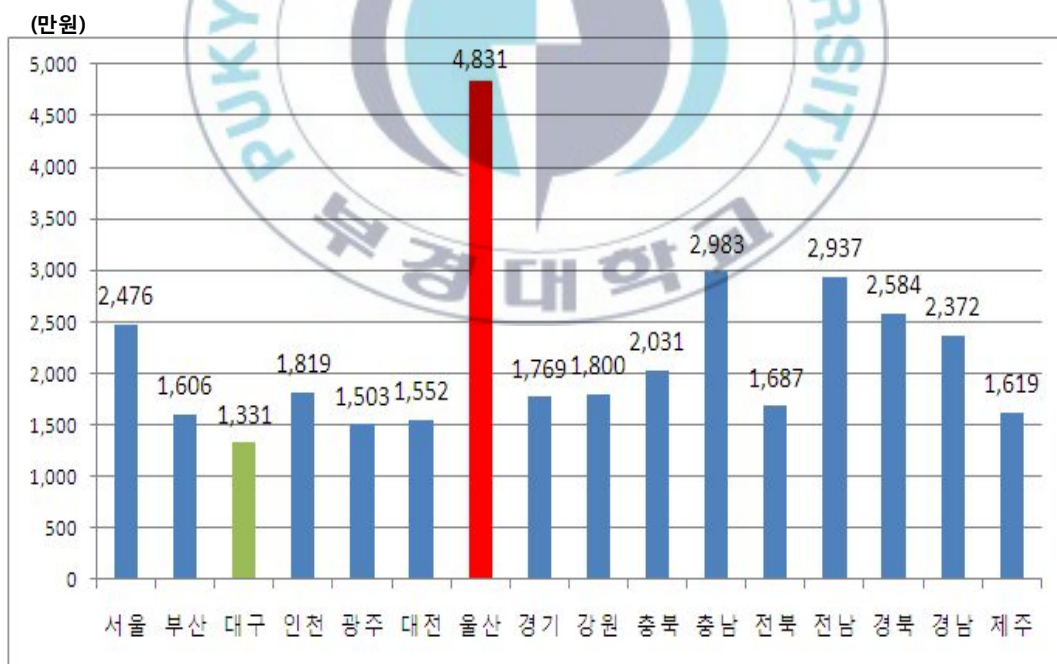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2. 2008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

2008년 지역내총생산을 지역의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지역내총생산 총량에서 시·도 중에서 7위를 차지한 울산이 48백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내총생산 총량에서는 10위였던 대구가 13백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가장 높은 울산과의 차이는 무려 35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내총생산 총량에서는 1위, 2위를 차지한 서울, 경기도는 각각 25백만원, 18백만원으로 5위, 10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전국 1인당 지역내총생산 22백만원보다 높은 지역은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서울, 경남 6곳으로 나타났고, 낮은 지역은 충북, 인천, 강원, 경기도 등 10곳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2008년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3. 2000년 이후 지역내총생산 추이

1) 지역내총생산

2000년 이후 지역내총생산의 추이를 2005년 기준으로 한 연쇄지수로 살펴 보면 <표 3-2>와 같고 연쇄지수로 2000년대비 성장률을 보면 <그림 3-2>와 같이 충남이 102.7%p 증가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23.8%p 성장에 그친 대구가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7개 특·광역시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 나타낸 지역은 인천으로 49.4%p의 성장률을 보였고 9개도에서는 충남, 경기, 경북, 경남 4개도가 50%p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7개 특·광역시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표 3-2> 시·도별 지역내총생산⁶⁾ 추이

(단위: 2005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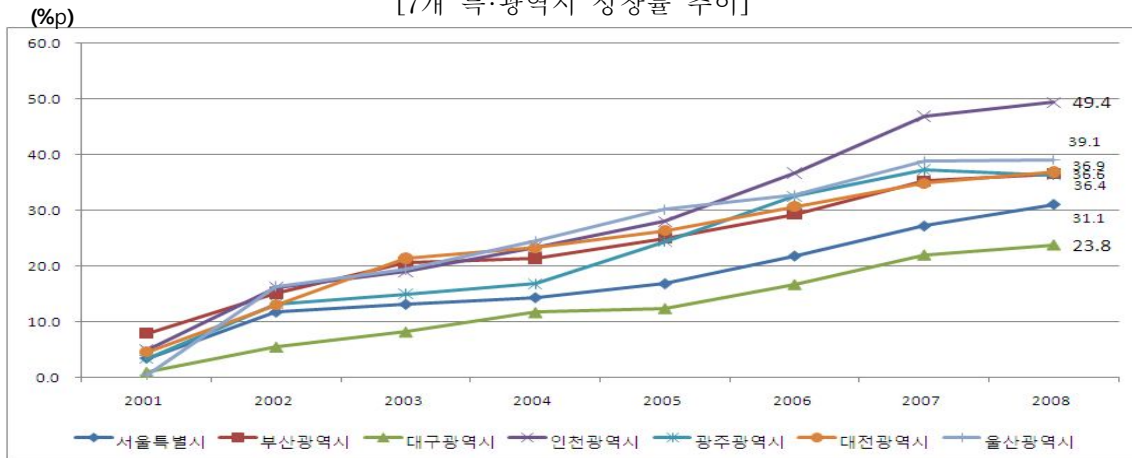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서울	85.6	88.5	95.6	96.8	97.8	100.0	104.3	108.9	112.2
부산	80.0	86.3	92.1	96.5	97.1	100.0	103.4	108.2	109.3
대구	89.0	89.9	93.9	96.3	99.4	100.0	103.9	108.6	110.2
인천	78.1	81.9	90.7	92.9	96.4	100.0	106.8	114.7	116.7
광주	80.4	83.1	91.0	92.5	93.9	100.0	106.5	110.4	109.7
대전	79.1	82.7	89.4	96.0	97.5	100.0	103.4	106.7	108.3
울산	76.8	77.2	89.4	91.7	95.6	100.0	101.9	106.6	106.8
경기	65.3	69.3	78.8	82.6	90.1	100.0	107.7	114.3	118.9
강원	82.1	84.0	89.7	97.2	98.2	100.0	105.0	110.0	111.0
충북	79.4	80.3	87.0	90.4	99.3	100.0	103.9	110.0	112.2
충남	63.2	65.0	71.0	81.1	91.1	100.0	112.6	120.6	128.1
전북	84.9	87.0	90.5	95.0	97.8	100.0	104.5	110.4	111.6
전남	84.6	87.4	94.4	96.5	98.1	100.0	101.7	108.3	111.5
경북	67.6	72.6	79.7	86.4	92.9	100.0	101.3	110.3	111.1
경남	78.1	85.7	90.0	95.3	98.1	100.0	105.7	111.5	117.9
제주	78.1	84.8	91.6	94.5	99.2	100.0	102.1	108.6	104.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6) 2005년기준 연쇄지수

〈그림 3-4〉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2000년대비 성장률 추이

[7개 특·광역시 성장률 추이]



[9개 도 성장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2) 1인당 지역내총생산

2000년 이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추이는 〈표 3-3〉 과 같고 울산이 2000년 이후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대구는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최하위를 나타냈고 울산과의 차이가 2000년 약3.2배에서 2008년 약3.6배로 그 차이가 폭이 더 벌어지고 있다.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표준편차는 2000년 460만원, 2001년 471만원, 2002년 539만원, 2003년 559만원, 2004년 666만원, 2005년 681만원, 2006년 697만원, 2007년 778만원, 2008년 874만원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추이

(단위: 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서울	1,502	1,625	1,838	1,943	1,982	2,087	2,197	2,359	2,476
부산	914	1,026	1,113	1,203	1,270	1,340	1,391	1,494	1,606
대구	864	908	985	1,033	1,095	1,147	1,218	1,306	1,331
인천	1,075	1,192	1,366	1,414	1,512	1,567	1,668	1,829	1,819
광주	950	1,025	1,108	1,147	1,205	1,309	1,407	1,473	1,503
대전	1,003	1,055	1,171	1,257	1,323	1,364	1,409	1,492	1,552
울산	2,796	2,904	3,257	3,343	3,840	3,897	4,022	4,451	4,831
경기	1,253	1,309	1,406	1,456	1,559	1,595	1,671	1,754	1,769
강원	1,119	1,177	1,285	1,431	1,500	1,546	1,631	1,767	1,800
충북	1,328	1,368	1,480	1,583	1,759	1,800	1,886	2,022	2,031
충남	1,558	1,639	1,858	2,097	2,310	2,476	2,664	2,848	2,983
전북	1,001	1,068	1,156	1,224	1,332	1,388	1,474	1,614	1,687
전남	1,368	1,461	1,712	1,867	2,110	2,312	2,306	2,603	2,937
경북	1,456	1,539	1,691	1,905	2,201	2,329	2,366	2,428	2,584
경남	1,305	1,450	1,578	1,666	1,783	1,874	1,981	2,213	2,372
제주	1,021	1,079	1,218	1,299	1,395	1,471	1,490	1,604	1,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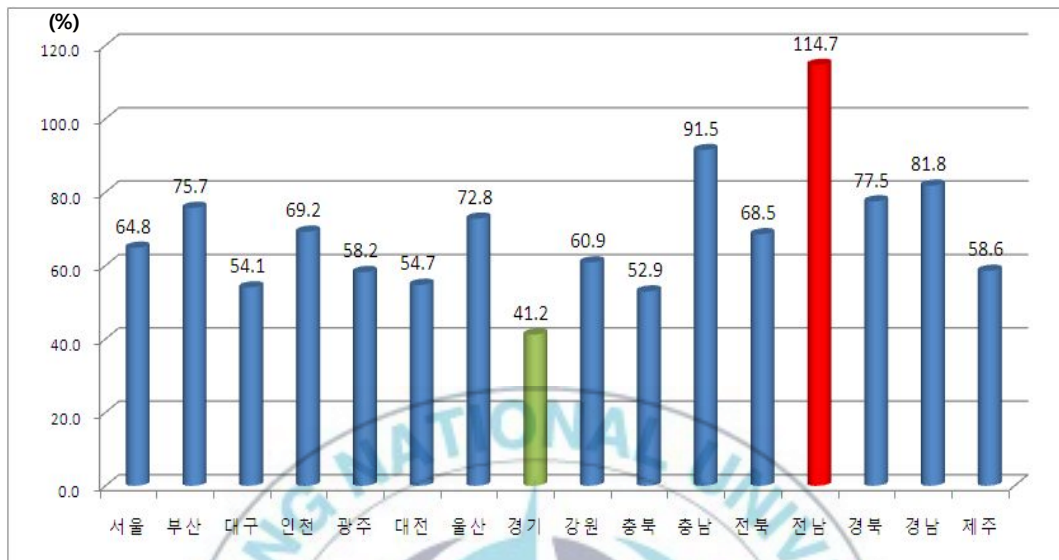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또한 2000년대비 전국 1인당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68.6%이며 2000년대비 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2000년 1,368만원에 2,937만원으로 114.7%를 나타냈고, 2000년대비 성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로 2000년 1,253만원에서 2008년 1,769만원으로 41.2% 성장에 그쳤다.

그리고 2000년대비 전국 1인당 지역내총생산성장률 보다 성장률이 높은 지역은 전남(114.7%), 충남(91.5%), 경남(81.8%), 경북(77.5%), 부산(75.7%), 울산(72.8%), 인천(69.2%), 전북(68.5%) 8곳이고, 2000년대비 전국성장률 보다 성장률이 낮은 지역은 서울(64.8%), 강원(60.9%), 제주(58.6%), 광주(58.2%), 대전(54.7%), 대구(54.1%), 충북(52.9%), 경기(41.2%) 8곳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0년 이후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전국 평균성장률 이상인 지역은 부산, 울산, 인천 3곳이고 서울, 광주, 대전, 대구 4곳은 전국 평균성

장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2000년대비 성장률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제2절 지역총소득(분배소득)

1. 2008년 지역총소득

2008년 시·도 전체의 지역총소득(명목)은 1,036조원 규모이며 이는 전년에 비해 약 51조원(5.2%) 증가한 수준이다.

시·도별 지역총소득 규모는 서울이 318조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기 218조원, 경남 60조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가 8조원으로 가장 작고 그 다음으로 광주, 강원으로 23조원 수준을 보였다.

지역내총생산대비 지역총소득이 많은 지역은 울산을 제외한 6개 특·광역시와 경기 지역이고 지역내총생산대비 지역총소득이 적은 지역은 울산 및 경기를 제외한 8개도로 나타났다.

이는 직주에 분리로 역출퇴근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산계정의 지역내총생산 즉 생산소득으로 지역소득을 파악했을 때 분배측면의 소

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지역이 경남, 경북 등 8개도와 울산 지역으로 나타났고 생산소득이 분배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지역이 부산, 대구, 등 울산을 제외한 6개 특·광역시와 경기 지역으로 확인 됐다.

그 중에서 부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의 경우를 살펴보면 생산소득 즉 지역 내총생산은 부산 56조원, 경남 74조원, 대구 33조원, 경북 68조원 이었으나 분배소득 즉 지역총소득은 부산 59조원, 경남60조원, 대구 38조원, 경북 54조원으로 부산과 대구는 분배소득이 높고, 경남과 경북은 생산소득이 높다.

시·도별 주요소득구조를 보면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5대광역시와 경기, 충북의 경우는 피용자보수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과 울산 및 7개도에서는 피용자보수가 50%미만의 구조를 보였다.

전년대비 증감률은 경북 15.9%, 울산 12.2%, 경남 12.2%로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강원 1.9%, 광주1.9%로 1%대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 3-4〉 2008년 시·도별 지역총소득

(단위: 10억원, %)

	지역총소득	주요 소득구조			지역 비중	순위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및 재산소득	생산 및 수입세		
서울	318,234.1	39.1	36	8.8	30.7	1
부산	59,417.2	54.1	28.1	8.5	5.7	4
대구	37,632.9	54.6	27.1	9.4	3.6	8
인천	48,384.3	52.8	25.2	12.1	4.7	6
광주	22,599.7	58.6	24.1	8.6	2.2	15
대전	26,534.4	55.9	24	7.8	2.6	11
울산	37,566.4	39.5	21.9	32.2	3.6	9
경기	218,116.3	52.7	25.1	10.1	21.0	2
강원	22,898.2	49.2	27.8	10.4	2.2	14
충북	24,966.8	50.5	24.8	12.1	2.4	13
충남	39,677.2	41.4	24.3	19.1	3.8	7
전북	26,070.5	49.8	28.2	9.5	2.5	12
전남	32,168.4	36.1	26.5	26	3.1	10
경북	53,620.6	38.5	37.7	8.7	5.2	5
경남	60,059.9	45.6	31.4	11.3	5.8	3
제주	8,263.9	44.7	34.1	8.2	0.8	1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또한 지역총소득의 지역비중은 서울 30.7%, 경기 21.0%, 경남 5.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지역의 지역총소득이 전국의 57.5%로 지역내총생산의 지역비중(50.7%)보다 6.8%p 높게 나타났다.

지역총소득을 제도부문별로 볼 때 <표 3-7>와 같고 지역총소득중에서 시·도별로 개인부문⁷⁾이 가장 높게 차지하는 지역은 78.6%를 나타낸 대구이며, 비금융법인부문에서 가장 높게 차지하는 지역은 28.7%인 경북이고, 금융법인부문에서 가장 높게 차지하는 지역은 10.7%인 서울로 나타났으며 일반정부부문에서 가장 높게 차지하는 지역은 33.4%를 보인 울산이었다.

<표 3-5> 2008년 시·도별, 제도부문별 지역총소득

(단위: 10억원, %)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순위
		비금융	금융	일반정부	개인		
서울	318,234.1	22.9	10.7	10.7	55.7	154,921.2	1
부산	59,417.2	12.5	1.4	10.6	75.5	42,567.8	3
대구	37,632.9	7.3	2.0	12.1	78.6	28,360.8	7
인천	48,384.3	17.4	0.7	14.4	67.5	30,073.4	5
광주	22,599.7	9.6	1.3	11.7	77.4	17,067.2	12
대전	26,534.4	11.9	0.9	14.9	72.3	18,039.4	11
울산	37,566.4	17.0	0.4	33.4	49.3	16,559.0	14
경기	218,116.3	17.2	0.5	12.8	69.5	137,443.3	2
강원	22,898.2	7.2	0.7	22.2	69.8	15,985.9	15
충북	24,966.8	11.0	0.4	18.6	69.9	16,858.6	13
충남	39,677.2	14.4	0.4	24.8	60.4	22,996.4	8
전북	26,070.5	8.4	1.1	16.3	74.2	19,878.0	9
전남	32,168.4	8.8	0.7	33.1	57.5	18,914.6	10
경북	53,620.6	28.7	0.5	13.5	57.2	30,033.4	6
경남	60,059.9	15.9	1.0	16.9	66.2	37,934.0	4
제주	8,263.9	4.5	1.6	15.5	78.4	6,352.3	1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 : 총처분가능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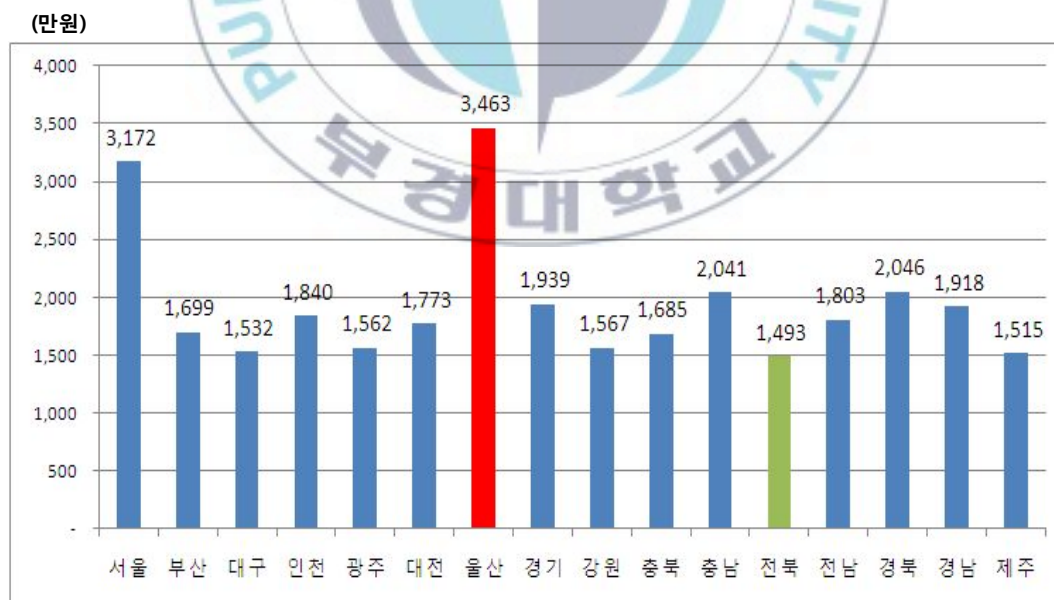
7) 개인부문은 가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로 구성

개인소득중에서 총처분가능소득으로 볼 때 취업자수⁸⁾ 비중 높은 서울이 155조원, 경기도가 137조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자수 비중이 적은 강원이 16조원, 제주가 6조원으로 낮게 나타났다.

2. 2008년 1인당 지역총소득

지역총소득을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지역총소득에 있어서는 울산이 3,463만원으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 이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나 1인당 지역내총생산(4,831만원)보다는 1,368만원(-28.3%) 적었다.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1인당 지역총소득이 많은 서울은 3,172만원이었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2,476만원)보다는 700만원(28.3%) 많았다. 1인당 지역총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1,493만원인 전북으로 울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43%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다.

〈그림 3-6〉 2008년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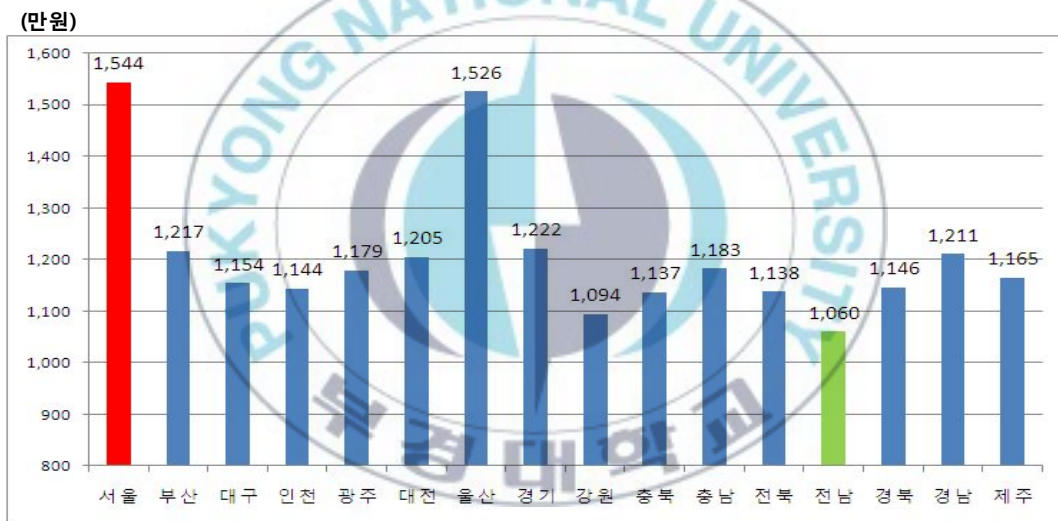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8) 2008년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서울(20.9%), 경기(23.5%), 강원(2.9%), 제주(1.2%).

3. 2008년 1인당 개인소득⁹⁾

지역총소득 중에서 개인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을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이 1,544만원, 울산 1,526만원으로 전국 평균 1,263만원보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지역총소득에서 울산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서울이 1인당 개인소득에서는 울산을 앞섰다. 그 외 14개 시·도에서는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지역총소득에서는 11위, 12위, 8위였던 충북(1,137만원), 강원(1,094만원) 전남(1,060만원)이 각각 14위, 15위, 16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그림 3-7〉 2008년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4. 2000년 이후 지역소득 추이

1) 지역총소득 추이

2000년 이후 지역내총소득(명목) 추이는 〈표 3-6〉과 같고 2000년 지역총소득을 보면 서울이 178조원으로 1위, 경기가 127조원으로 2위, 부산이 38조원으로 3위, 경남이 32조원으로 4위를 차지하였고 2000년에서 2007년까지

9) 개인부문 총처분가능소득.

동일 순위를 보였으나 2008년 60조원을 기록한 경남이 59조원을 기록한 부산을 밀어내고 3위에 올랐다.

2000년대비 증감률을 보면 <그림 3-8> 과 같은 울산이 92.8%의 증가를 보여 시·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내총생산에서는 충남이 2000년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분배측면의 지역총소득은 2000년 대비 88.2%의 증가로 울산, 경남(89.0%),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국 평균 증가율 72.5%보다 높은 지역은 울산, 경남, 충남을 포함한 인천(86.2%), 서울(79.2%), 경북(78.7%), 등 7개 지역이고, 전국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지역은 경기(71.7%), 광주(63.8%), 충북(63.4%), 전남(54.8%), 부산(54.7%), 제주(53.7%), 강원(52.7%), 대구(46.9%)등 9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44.2% 증가에 그친 전북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북은 지역내총생산에서도 2000년대비 성장률이 31.4%p에 그쳐 시·도 중에서 14위, 9개도 중에서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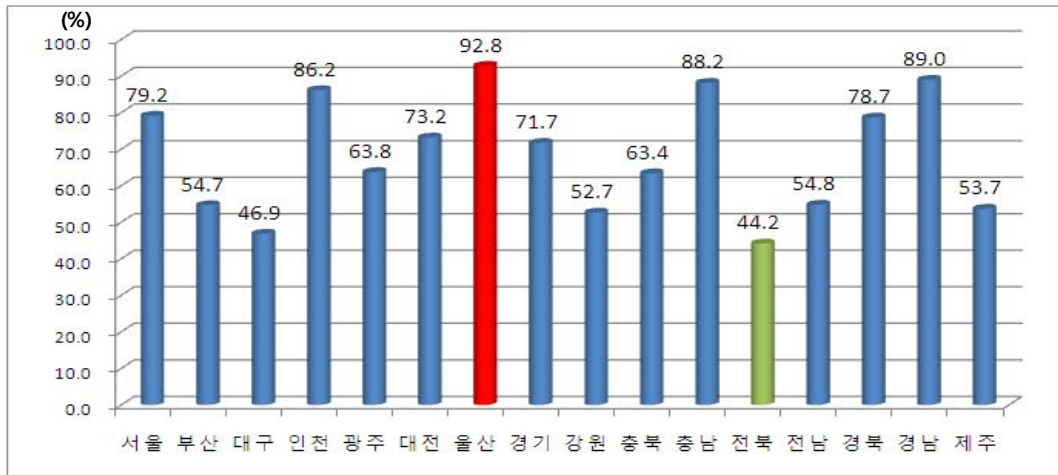
<표 3-6> 시·도별 지역총소득(명목) 추이

(단위: 조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서울	177.6	199.6	226.6	243.6	254.4	268.5	281.7	311.2	318.2
부산	38.4	41.5	44.7	46.8	48.2	51.1	53.6	56.7	59.4
대구	25.6	27.2	28.9	30.2	32.5	33.1	34.9	36.3	37.6
인천	26.0	27.7	30.3	32.5	35.2	37.1	40.2	44.4	48.4
광주	13.8	15.1	16.6	17.3	18.2	19.4	20.7	22.2	22.6
대전	15.3	16.7	18.4	20.3	21.6	22.5	24.1	25.7	26.5
울산	19.5	20.8	24.4	23.9	26.4	28.2	29.6	33.5	37.6
경기	127.0	130.8	152.4	163.6	182.7	187.1	200.1	208.5	218.1
강원	15.0	16.1	17.3	18.6	19.3	20.0	21.1	22.5	22.9
충북	15.3	16.3	17.6	18.7	20.6	21.5	22.1	23.4	25.0
충남	21.1	22.3	24.5	27.4	31.6	32.3	34.7	36.8	39.7
전북	18.1	19.4	20.0	20.8	21.7	22.3	23.4	25.0	26.1
전남	20.8	22.3	24.0	25.2	26.8	27.9	28.0	30.8	32.2
경북	30.0	31.6	34.2	36.9	42.2	44.4	43.8	46.3	53.6
경남	31.8	35.5	37.9	40.6	43.6	45.5	48.8	53.5	60.1
제주	5.4	5.6	6.2	6.4	6.9	7.4	7.5	8.0	8.3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그림 3-8〉 시·도별 지역총소득 2000년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2) 개인소득 추이

2000년 이후 개인소득 추이는 〈표 3-7〉과 같고 2000년 개인소득은 서울 98조원, 경기 76조원, 부산 30조원, 경남 26조원 등의 지역순으로 높았는데 2000년 이후 2008년 까지 이 4지역의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2000년대비 증감률을 보면 〈그림 3-9〉에서 보듯이 경기가 81.0%의 증가를 보여 시·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총소득에서는 울산이 2000년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개인소득은 2000년 대비 76.6%의 증가로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국 평균 증가율 60.0%보다 높은 지역은 경기, 울산을 포함한 대전(68.2%), 경남(67.6%) 등 6 지역이고, 전국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57.5%), 충남(53.5%), 제주(56.1%) 등 10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38.0% 증가에 그친 전남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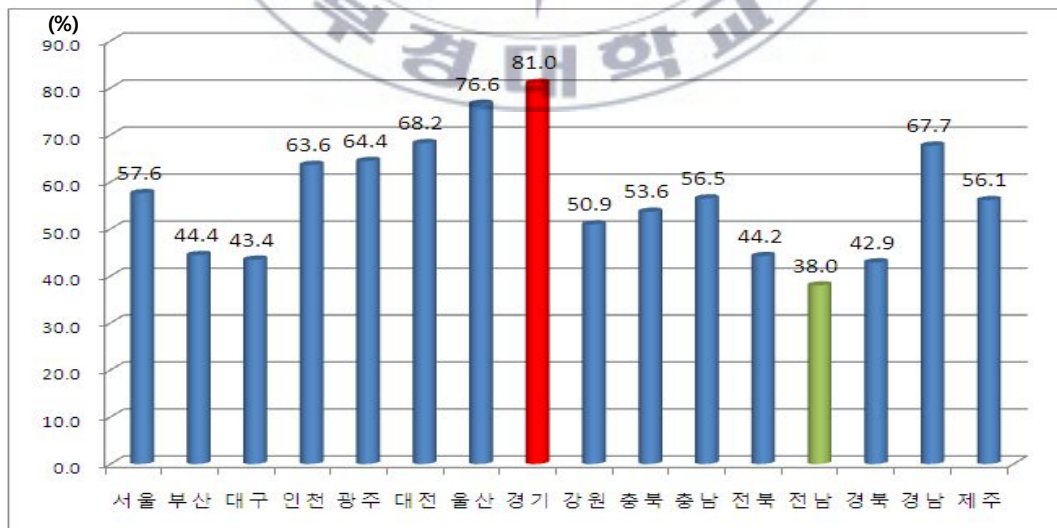
〈표 3-7〉 시·도별 개인소득 추이

(단위: 조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서울	98.3	104.2	111.0	121.4	130.4	137.5	142.9	150.2	154.9
부산	29.5	30.8	32.4	33.9	35.6	37.7	39.0	40.4	42.6
대구	19.8	20.6	21.6	22.8	24.2	25.6	26.4	27.3	28.4
인천	18.4	19.2	20.6	22.2	23.9	25.3	26.8	28.1	30.1
광주	10.4	11.3	11.9	12.7	13.6	14.7	15.5	16.3	17.1
대전	10.7	11.5	12.3	13.4	14.3	15.4	16.5	17.3	18.0
울산	9.4	10.2	11.1	11.8	13.0	13.9	14.3	15.6	16.6
경기	75.9	81.9	91.0	99.1	109.0	116.5	123.4	128.5	137.4
강원	10.6	11.3	11.9	12.8	13.4	14.0	14.5	15.3	16.0
충북	11.0	11.5	12.1	12.7	13.6	14.5	15.2	16.0	16.9
충남	14.7	15.1	15.7	16.6	18.6	19.2	20.4	21.5	23.0
전북	13.8	14.7	14.8	15.5	16.4	17.1	17.8	19.0	19.9
전남	13.7	14.7	14.7	15.4	16.3	16.8	17.3	18.1	18.9
경북	21.0	21.7	22.7	23.4	25.2	26.7	27.6	28.8	30.0
경남	22.6	24.6	25.6	27.5	29.8	31.4	33.3	35.3	37.9
제주	4.1	4.2	4.6	4.7	4.9	5.5	5.6	5.9	6.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그림 3-9〉 시·도별 개인소득 2000년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3) 1인당 지역총소득 추이

2000년 이후 1인당 지역총소득 추이는 <표 4-5> 와 같고 2000년에서 2002년까지는 울산이 1위를 2003에서 2007년까지는 근소한 차이로 서울이 1위를 차지하고 2008년 다시 울산이 서울보다 291만원 많은 3,463만원으로 다시 1위로 올라 섰다. 반면 전북은 2000년 939만원, 2008년 1,493만원 등 2000년에서 2008년 9년 동안 계속해서 시·도 중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00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2000년 1,080만원에서 2008년 2,046만원으로 89.4% 증가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2000년 1,389만원에서 2008년 1,939만원으로 39.6% 성장에 그쳤다. 1인당 지역총소득의 2000년 대비 전국 평균 증가율 68.3%보다 높은 지역은 경북, 울산(83.9%), 경남(82.8%), 충남(81.9%) 등 7개 지역 이었고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지역은 부산(65.0%), 충북(64.9%), 대전(62.2%) 등 9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3-8>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추이

(단위: 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서울	1,763	1,978	2,256	2,429	2,535	2,682	2,811	3,104	3,172
부산	1,030	1,116	1,215	1,283	1,332	1,426	1,507	1,608	1,699
대구	1,014	1,072	1,144	1,195	1,283	1,321	1,404	1,467	1,532
인천	1,029	1,087	1,177	1,263	1,369	1,440	1,550	1,699	1,840
광주	995	1,080	1,168	1,209	1,260	1,342	1,437	1,534	1,562
대전	1,093	1,180	1,282	1,398	1,481	1,534	1,634	1,732	1,773
울산	1,883	1,991	2,307	2,250	2,474	2,632	2,757	3,100	3,463
경기	1,389	1,385	1,553	1,613	1,756	1,763	1,849	1,889	1,939
강원	990	1,064	1,146	1,240	1,293	1,345	1,424	1,529	1,567
충북	1,022	1,086	1,177	1,256	1,383	1,450	1,490	1,576	1,685
충남	1,122	1,186	1,304	1,464	1,671	1,685	1,798	1,902	2,041
전북	939	1,013	1,054	1,114	1,179	1,229	1,301	1,412	1,493
전남	1,022	1,111	1,225	1,306	1,423	1,505	1,533	1,707	1,803
경북	1,080	1,148	1,250	1,364	1,580	1,675	1,652	1,756	2,046
경남	1,049	1,164	1,236	1,314	1,405	1,463	1,566	1,713	1,918
제주	1,023	1,066	1,164	1,195	1,289	1,374	1,389	1,474	1,51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그림 3-10〉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2000년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4) 1인당 개인소득 추이

2000년 이후 1인당 개인소득 추이는 〈표 3-9〉와 같고 1인당 지역총소득과 달리 1인당 개인소득은 2000년 이후 2008년까지 9년간 계속해서 서울, 울산, 경기도가 각각 1위,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인당 지역총소득은 전북이 2000년 이후 9년간 최하위였으나 1인당 개인소득은 전남이 2000년 673만원, 2008년 1,060만원 등 2000년 이후 9년간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대비 1인당 개인소득 증가율을 보면 1위를 서울이, 울산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비 증감률을 보면 〈그림 3-11〉과 같으며 울산이 68.4%의 증가를 보여 시·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47.2%의 증가율에 그친 대구가 가장 낮은 증가율로 최하위를 나타냈다.

1인당 개인소득의 2000년대비 전국 평균 55.5%보다 높은 지역은 울산, 서울, 전북, 대전, 전남 등 9개 지역이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충북, 부산, 충남 등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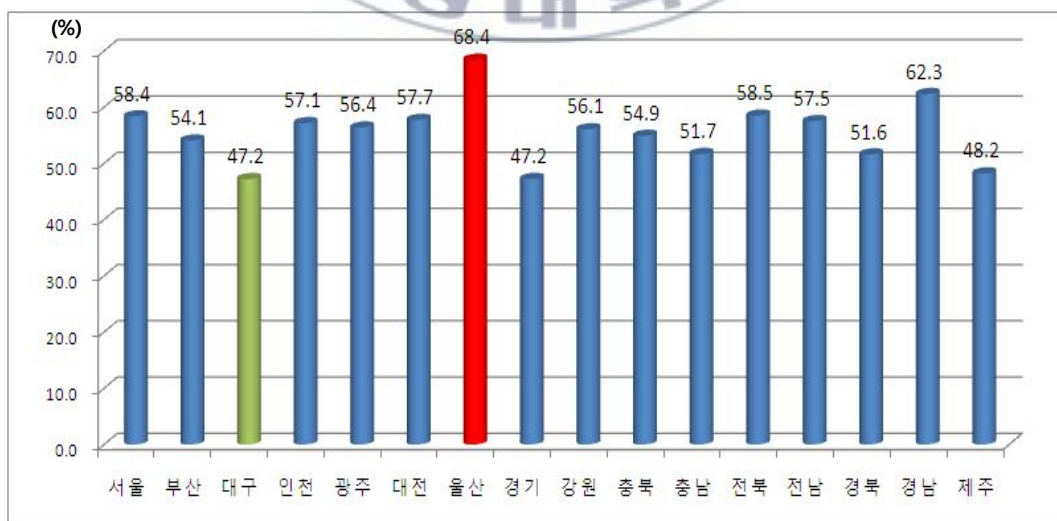
〈표 3-9〉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추이

(단위: 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서울	975	1,033	1,105	1,211	1,299	1,373	1,426	1,499	1,544
부산	790	828	881	929	985	1,050	1,098	1,147	1,217
대구	784	814	855	900	955	1,021	1,065	1,104	1,154
인천	728	755	803	863	930	983	1,032	1,075	1,144
광주	754	805	834	890	943	1,019	1,073	1,125	1,179
대전	764	809	858	924	983	1,051	1,115	1,162	1,205
울산	906	975	1,046	1,112	1,215	1,296	1,327	1,448	1,526
경기	830	867	928	977	1,047	1,097	1,140	1,164	1,222
강원	701	745	790	853	896	938	980	1,039	1,094
충북	734	767	806	850	914	979	1,027	1,077	1,137
충남	780	805	837	889	981	1,000	1,058	1,110	1,183
전북	718	767	781	831	890	943	992	1,073	1,138
전남	673	729	747	800	864	907	945	1,000	1,060
경북	756	789	831	864	946	1,007	1,044	1,094	1,146
경남	746	807	833	889	961	1,012	1,068	1,129	1,211
제주	786	794	856	877	914	1,018	1,035	1,089	1,16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그림 3-11〉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2000년 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제4장 지역소득 격차 실증분석

제1절 지역유형별 분석

2000년에서 2008년까지 9년간의 지역별 인구 1인당 생산소득과 분배소득을 기준으로 클라센(L. Klaassen)이 구분한 번성지역(prosperous region), 발전도상 저개발지역(underdeveloped region in expansion), 잠재적 저개발지역(potentially underdeveloped region), 저개발지역(underdeveloped region)의 넷으로 지역유형으로 분석 결과 <표 4-1> 과 같이 분류 되었다.

1인당 생산소득기준과 분배소득기준이 동일하게 결과가 나온 지역유형은 잠재적 저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이다. 지난 9년간 경제성장수준 및 2008년 지역소득수준이 전국평균을 밑도는 저개발지역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9개지역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구는 경제성장률이 전국평균의 절반수준으로 전국 최하위이고 지역소득수준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저개발지역으로 고착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 지역유형별 구분¹⁰⁾

지역유형	소득기준(y)	
	1인당 지역내총생산	1인당 지역총소득
번성지역 (prosperous region)	충남, 경북, 경남	경기, 충남, 경북
발전도상 저개발지역 (underdeveloped region in expansion)	인천, 경기	인천, 경남
잠재적 저개발지역 (potentially underdeveloped region)	서울, 울산	서울, 울산
저개발지역 (underdeveloped region)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10) g:국가경제성장률, gi:지역경제성장률, y:전국소득, yi:지역소득일때 번성지역은 $gi > g, yi > y$, 발전도상 저개발지역은 $gi > g, yi < y$, 잠재적 저개발지역은 $gi < g, yi > y$, 저개발지역은 $gi < g, yi < y$.

〈표 4-2〉 시·도별 경제성장수준 및 소득수준

시도	경제성장수준 ¹¹⁾ (2000년~2008년)	소득수준 ¹²⁾ (2008년)	
		1인당지역내총생산	1인당지역총소득
서울	0.66	1.14	1.63
부산	0.79	0.74	0.88
대구	0.51	0.61	0.79
인천	1.00	0.83	0.95
광주	0.77	0.69	0.80
대전	0.79	0.71	0.91
울산	0.70	2.21	1.78
경기	1.74	0.81	1.00
강원	0.67	0.83	0.81
충북	0.82	0.93	0.87
충남	2.28	1.37	1.05
전북	0.68	0.77	0.77
전남	0.62	1.35	0.93
경북	1.18	1.18	1.05
경남	1.04	1.09	0.99
제주	0.68	0.74	0.78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경제성장수준이 전국평균보다 낮지만 지역소득수준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잠재적 저개발지역인 서울, 울산은 경제성장수준은 전국평균보다 다소 하회하지만 지역소득수준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임을 〈표 4-2〉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번성지역과 발전도상 저개발지역은 지역소득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수준과 지역소득수준 모두 전국평균보다 높은 번성지역은 1인당 생산소득기준일 경우 충남, 경북, 경남으로 분류되나 1인당 분배소득기준은 경기, 충남, 경북으로 나타났으며 두 기준에서 모두 번성지역으로 분류된 충남은 지난 9년간 경제성장률이 전국평균의 약 2.3배에 달했다. 또한 경제성장수준은 전국평균보다 높고 지역소득수준에서 전국평균보다 낮은 발전도상 저개발지역은 1인당 생산소득기준일 경우 인천, 경기로 분류되나 1인당 분배소득기준은 인천, 경남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지역소득기준에 따라 달리 분류되는 지역이 경기, 경남임을 알 수 있다.

11) 2000년대비 전국평균 경제성장률을 1로 볼 때 지역별 경제성장률.

12) 전국평균소득을 1로 볼 때 2008년 지역별 소득.

제2절 불평등척도로 본 지역소득 격차

지역간 소득 격차와 관련해서 가장 적합한 지표로 지역주민의 후생수준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인구 1인당 분배소득에 관한 지표이나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 1인당 생산소득의 지표를 대용해왔다. 하지만 분배소득 지표를 2009년 12월부터 통계청에서는 공표하여 그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분배소득 지표를 통한 지역소득 불평등 척도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니계수와 변동계수를 측정한 결과 <표 4-3> 과 같이 나타났다.

<표 4-3> 지역소득별 불평등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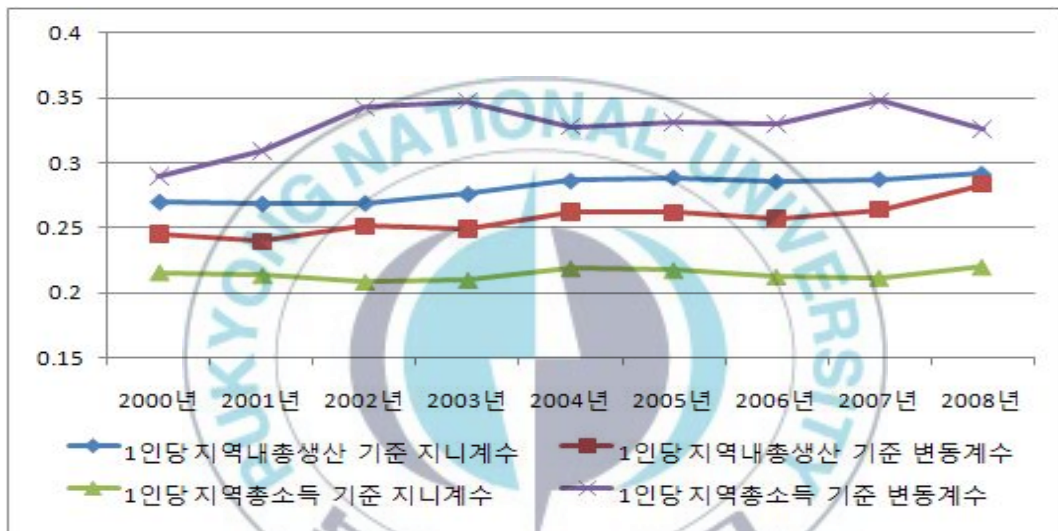
	1인당 지역내총생산 기준		1인당 지역총소득 기준	
	지니계수	변동계수*	지니계수	변동계수*
2000년	0.27029	0.24551	0.21602	0.28970
2001년	0.26880	0.23952	0.21366	0.30923
2002년	0.26929	0.25153	0.20866	0.34285
2003년	0.27625	0.24929	0.21011	0.34727
2004년	0.28645	0.26208	0.21912	0.32773
2005년	0.28892	0.26176	0.21773	0.33140
2006년	0.28579	0.25702	0.21272	0.32998
2007년	0.28767	0.26390	0.21186	0.34802
2008년	0.29165	0.28349	0.22021	0.32608

* 지역의 인구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한 가중변이계수

생산소득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기준으로 측정한 지니계수와 변동계수는 각각 2000년 0.27029, 0.23551에서 2008년 0.29165, 0.28349로 2000년 이후 2008년 까지 점차 지역간 소득 격차가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분배소득인 1인당 지역총소득기준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2000년 0.21602에서 2008년 0.22021로 생산소득기준의 지니계수와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그 폭은 다소 완만하게 나타났다. 또한 변동계수의 경우는 생산소득과 분배소득에 따라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지역간 소득 격차 추이과정에서 다소

상이한 방향성을 나타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 기준의 변동계수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지만 1인당 지역총소득 기준의 변동계수는 2003년 0.34727에 2004년 0.30923으로 축소하여 2006년까지 보합수준을 유지하고 2007년 0.34802로 다시 확대되고 2008년 다시 0.32608로 축소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그림 4-1> 과 같이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총소득 기준의 지역소득 불평등척도에 다소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림 4-1> 불평등척도별 지역소득 격차 추이



제3절 지역내총생산대비 지역총소득 수준

지역내총생산대비 지역총소득 수준을 통해 지역별 순수취본원소득이 (+)인지 (-)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제조업의 탈도시화에 따른 대도시의 분배소득은 생산소득에 비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표 4-4> 는 시·도별 지역내총생산대비 지역총소득 수준으로 각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을 100으로 볼때 지역총소득을 나타낸다.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울산은 제외한 6개 특·광역시와 경기의 경우는 생산소득보다 분배소득이 많았으며 그 외 시·도에서는 분배소득보다 생산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인근 도(경남, 경북, 전남, 충남)보다 생산소득은 작으나 분배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의 탈도시화에 따른 직주의 분리와 지역외 순수취본원소득이 (+)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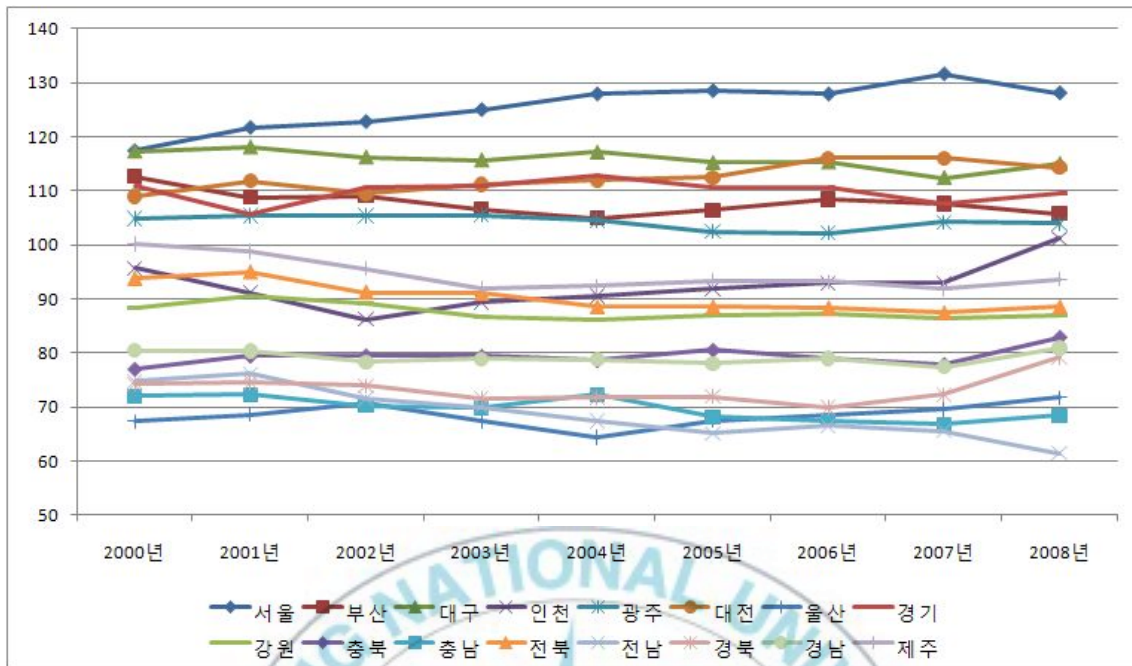
2008년 생산소득대비 분배소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생산소득의 약 128% 수준이며 그 뒤로 대구가 11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약 61% 수준인 전남이고 두 번째로 낮은 지역은 약 68% 수준을 보인 충남이며 세 번째로 낮은 지역은 공업도시인 울산으로 약 72% 수준으로 생산소득에 비해 분배소득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 지역에서는 그 만큼 순수취본원소득이 지역외 유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천은 2008년 처음으로 분배소득이 생산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의 경우는 2000년 이후 분배소득수준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로 이는 인구의 지역외 유출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겠다.

〈표 4-4〉 지역내총생산대비 지역총소득 수준 추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서울	117.4	121.7	122.8	125.0	127.9	128.5	127.9	131.6	128.1
부산	112.6	108.8	109.1	106.6	104.9	106.4	108.4	107.6	105.8
대구	117.3	118.1	116.2	115.7	117.1	115.2	115.3	112.4	115.0
인천	95.7	91.2	86.2	89.4	90.5	91.9	92.9	92.9	101.2
광주	104.8	105.4	105.4	105.5	104.6	102.5	102.2	104.2	103.9
대전	109.0	111.8	109.5	111.2	111.9	112.5	116.0	116.0	114.3
울산	67.3	68.6	70.8	67.3	64.4	67.5	68.6	69.6	71.7
경기	110.8	105.8	110.5	110.8	112.7	110.5	110.7	107.7	109.6
강원	88.4	90.4	89.2	86.7	86.2	87.0	87.3	86.5	87.0
충북	77.0	79.4	79.5	79.4	78.6	80.5	79.0	77.9	82.9
충남	72.0	72.3	70.2	69.8	72.3	68.1	67.5	66.8	68.4
전북	93.7	94.9	91.2	91.0	88.5	88.5	88.3	87.4	88.5
전남	74.7	76.1	71.5	70.0	67.4	65.1	66.5	65.6	61.4
경북	74.2	74.6	73.9	71.6	71.8	71.9	69.9	72.3	79.2
경남	80.4	80.3	78.3	78.9	78.8	78.0	79.0	77.4	80.9
제주	100.2	98.8	95.6	92.0	92.4	93.4	93.2	91.9	93.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그림 4-2〉 지역내총생산대비 지역총소득 추이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지역소득」.

이상과 같이 시·도별로 생산소득인 지역내총생산과 분배소득인 지역총소득간에는 그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고 특히 대도시와 인근도(道)의 지역소득을 해석 할 때 유의해야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제4절 생산소득과 분배소득의 T-검정

〈표 4-5〉는 시·도의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이다. 생산소득인 지역내총생산과 분배소득인 지역총소득의 총량 및 1인 모두 그 상관계수는 0.7이상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5〉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 상관계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량 기준	0.992	0.990	0.991	0.990	0.987	0.986	0.986	0.984	0.986
1인 기준	0.781	0.769	0.777	0.718	0.734	0.731	0.721	0.736	0.795

다만 지역소득의 총량은 0.9이상으로 그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반면 1인 기준은 그 보다 상관관계가 다소 떨어진다.

다음 <표 4-6>, <표 4-7>은 지역소득의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에 차이가 있는지를 각각 총량 및 1인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각 연도별 T-검정 결과이다.

<표 4-6> 지역소득 총량 기준의 T-검정 결과

대응 연도	대응차					t	자 유 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000년	-192.3	9242.4	2310.6	-5117.3	4732.6	-0.083	15	0.935
2001년	-94.8	10915.5	2728.9	-5911.2	5721.7	-0.035	15	0.973
2002년	28.6	13204.1	3301.0	-7007.4	7064.5	0.009	15	0.993
2003년	41.1	15135.9	3784.0	-8024.2	8106.4	0.011	15	0.991
2004년	152.1	17385.6	4346.4	-9112.0	9416.3	0.035	15	0.973
2005년	-50.8	18372.5	4593.1	-9840.9	9739.2	-0.011	15	0.991
2006년	86.9	19073.0	4768.2	-10076.4	10250.2	0.018	15	0.986
2007년	112.6	22061.1	5515.3	-11643.0	11868.1	0.020	15	0.984
2008년	481.9	21141.0	5285.2	-10783.3	11747.1	0.091	15	0.929

먼저 지역소득의 총량 기준의 T-검정 결과는 각 연도별 유의확률이 모두 0.9이상으로 유의수준 5%에서 물론 10%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소득인 지역내총생산과 분배소득인 지역총소득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소득 1인 기준의 T-검정 결과는 총량과는 달리 유의수준 5%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유의수준 10%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유의확률이 0.1이상이었으나 2002년 이후 2008년까지는 유의확률이 0.1이하로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1인

기준의 생산소득과 분배소득 간에는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소득격차를 파악할 때 총량보다는 지역인구로 나눈 1인기준의 소득이 더 유의미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측면의 소득인 지역내총생산과 분배측면의 소득인 지역총소득자료를 연구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할 것이다.

〈표 4-7〉 지역소득 1인 기준 T-검정 결과

대응 연도	대응차					t	자유 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000년	129.38	297.93	74.48	-29.38	288.13	1.73699	15	0.10287
2001년	131.13	306.75	76.69	-32.33	294.58	1.70988	15	0.10789
2002년	160.25	342.08	85.52	-22.03	342.53	1.87384	15	0.08057*
2003년	185.94	389.86	97.46	-21.80	393.68	1.90775	15	0.07575*
2004년	216.44	460.17	115.04	-28.77	461.65	1.88137	15	0.07948*
2005년	227.25	469.83	117.46	-23.11	477.61	1.93473	15	0.07211*
2006년	229.94	486.19	121.55	-29.14	489.01	1.89174	15	0.07799*
2007년	253.44	529.18	132.30	-28.54	535.42	1.91570	15	0.07466*
2008년	240.75	544.70	136.18	-49.50	531.00	1.76794	15	0.09740*

* : $p < 0.1$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지역간 소득 격차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역민의 후생수준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역소득의 분배계정에 관한 지표가 매우 유용하나 그에 대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측면의 소득과 분배측면의 소득간의 차이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생산측면의 소득 즉,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의 통계를 지역소득 자료로 이용해왔는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2009년 분배측면의 지역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분배계정의 추계가 작성되어 생산측면의 소득인 지역내총생산과 분배측면의 소득인 지역총소득의 그 차이와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측면의 소득인 지역내총생산과 분배소득측면의 지역총소득의 총량 및 1인기준의 상관관계에서는 그 상관계수가 각각 0.9와 0.7이상으로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두 소득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나 그 동안 여러 연구에서 생산측면의 지역소득인 지역내총생산이 분배측면의 지역소득을 대용하여 사용한 것이 큰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1인당 지역소득 수준으로 구분한 클라쎄의 지역유형에서는 번성지역과 발전도상 저개발지역에 2개지역이 차이를 보였다. 경제성장률 수준과 지역소득 수준이 전국평균이상인 번성지역의 경우 1인당 지역내총생산 기준 일 때는 충남, 경북, 경남인 반면 1인당 지역총소득 기준에서는 경기, 충남, 경북으로 나타났고, 경제성장률 수준은 전국평균보다 높지만 지역소득 수준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발전도상 저개발지역에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 기준 일 때 인천, 경기였으나 1인당 지역총소득은 인천, 경남으로 나타나 경기, 경남지역이 달리 구분되었다. 또한 지역소득 격차를 알아 볼 수 있는 불평등척도인 지니계수와 변동계수 측정에서는 지니계수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총소득으로 측정

한 결과가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그 폭은 다소 완만하게 나타났다. 반면 변동계수의 경우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총소득에 따라 상이한 방향성으로 나타나 생산소득과 분배소득 자료를 이용한 불평등척도가 각각 달리 해석 될 수 있다.

그리고 생산측면의 소득인 지역내총생산대비 분배측면의 지역소득인 지역총소득 수준이 시·도별 높은 지역은 서울, 대구, 대전, 경기, 부산, 인천, 광주 7개 지역으로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대도시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론에서 언급한 부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은 물론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사이에는 제조업의 탈도시화에 따른 지역민의 직주(職住)의 분리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지역민소득 수준을 해석 할 경우에는 분배소득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생산소득과 분배소득의 2000년에서 2008년까지 각 연도별 T-검정결과에서는 총량수준에서는 유의확률이 0.9이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인기준에서는 2002년이후의 2008년까지 유의확률이 0.1 이하로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소득과 분배소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고찰과 실증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다.

향후 지역경제 및 지역소득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 지역소득 추계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생산소득과 분배소득 자료를 연구목적에 맞게 구별하여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소득은 지역산업구조나 지역경제격차 등에 이용하고, 분배소득은 지역소득구조 및 지역소득 격차분석 등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분배측면의 지역소득 지표가 2000년까지만 추계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시계열을 통한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 참고문헌 >

I. 국내자료

- 구재운 외(1999), “지역별 소득 재검토”,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Winter 1999 KIEA Conference. Vol. II. 한국국제경제학회.
- 국토해양부, 「2010년 지적통계연보(2009.12.31기준)」, 2009년도.
- 김정희(2008), “지역소득 분배계정 추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논문.
- 김종일(2010), “한국의 지역간 소득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2권 제1호). pp. 181-203.
- 김용웅 · 차미숙 · 강현수(2005),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2006), 「지역경제론」 보성각.
- 류영임(2008), “한국의 소득재분배 정책 분석” 안동대학교 경제학석사학위논문.
- 배진성(2008), “한국 지역소득의 파급효과 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중희(1994), “한국의 경제적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9), 「2008년 지역소득(잠정)」, 보도자료.
- 통계청(2010), 「2008년 지역소득통계」, 온라인간행물.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 통계청, 「지역소득」, 각년도.
- 통계청, 「추계인구」, 각년도.
- 통계청, e-나라지표(www.index.go.kr).
- 허문구 · 최윤기 · 장재홍(2004), 「경제성장과 지역간 격차」 산업연구원(KIET).
- 황규선 · 현영남(2003), “경제성장과 지역경제력 불평등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통계청 「통계연구」 가을(제8권 제2호). pp. 91-110.
- 황명찬(2001), 「지역개발론」 행정학총서.

II. 외국자료

- Brown, A. J. and Burrows, E. M.(1977), *Regional Economic Problem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Glasson, J.(1974), *An Introduction to Regional Planning*, Hutchinson of London.
- Hansen, N(1968). *French Regional Planning*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pp.9-11.
- House, W. J.(1970), *Per Capita Income Differentials in the Provinces of Canada*, (Ph.D. Dissertation), Published on demand by University Microfilms, Ann Arbor, pp.64-65.
- Kuklinski, A.(1975),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Policies and Regional Planning," in Kuklinski, A.(ed.), *Regional Disaggregation of National Policies and Plans*, Mouton: Paris, pp.1-17.
- Markusen, A.(1985), *Profit Cycles, Oligopoly, and Regional Development*, Cambridge, Mass: MIT Press.
- Massey, D.(1978), "Regionalism: Some Current Issues," *Capital and Class* vol.6.
- Richardson, H. W.(1979), *Regional Economics: Location Theory, Urban Structure and Regional Changes*,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Vanhove, N. and Leo H. Klaassen(1987), *Regional Policy: A European Approach*(2nd Edition), Avebury.

【 부 록 】 시·도별 추계인구 및 구성비

〈표 A-1〉 시·도별 추계인구

(단위: 천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서울	10,078	10,087	10,042	10,030	10,036	10,011	10,020	10,026	10,032
부산	3,733	3,715	3,683	3,646	3,620	3,586	3,554	3,525	3,498
대구	2,529	2,535	2,530	2,530	2,531	2,506	2,484	2,470	2,457
인천	2,522	2,550	2,571	2,572	2,569	2,578	2,596	2,613	2,629
광주	1,382	1,401	1,421	1,431	1,443	1,444	1,443	1,445	1,447
대전	1,397	1,417	1,433	1,452	1,460	1,468	1,477	1,487	1,496
울산	1,036	1,047	1,056	1,062	1,066	1,070	1,075	1,080	1,085
경기	9,146	9,448	9,809	10,142	10,405	10,612	10,822	11,039	11,248
강원	1,516	1,516	1,510	1,501	1,496	1,488	1,479	1,470	1,461
충북	1,494	1,499	1,495	1,491	1,490	1,484	1,484	1,483	1,482
충남	1,879	1,882	1,876	1,872	1,892	1,918	1,928	1,936	1,944
전북	1,927	1,916	1,895	1,870	1,843	1,817	1,797	1,771	1,746
전남	2,035	2,011	1,963	1,929	1,881	1,852	1,829	1,807	1,784
경북	2,773	2,757	2,736	2,704	2,669	2,652	2,648	2,635	2,620
경남	3,036	3,047	3,069	3,093	3,100	3,108	3,117	3,125	3,131
제주	524	528	534	536	539	542	543	545	54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추계인구」.

〈표 A-2〉 시·도별 추계인구 구성비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서울	21.4	21.3	21.1	21.0	20.9	20.8	20.7	20.7	20.6
부산	7.9	7.8	7.7	7.6	7.5	7.4	7.4	7.3	7.2
대구	5.4	5.4	5.3	5.3	5.3	5.2	5.1	5.1	5.1
인천	5.4	5.4	5.4	5.4	5.3	5.4	5.4	5.4	5.4
광주	2.9	3.0	3.0	3.0	3.0	3.0	3.0	3.0	3.0
대전	3.0	3.0	3.0	3.0	3.0	3.1	3.1	3.1	3.1
울산	2.2	2.2	2.2	2.2	2.2	2.2	2.2	2.2	2.2
경기	19.5	20.0	20.6	21.2	21.7	22.0	22.4	22.8	23.1
강원	3.2	3.2	3.2	3.1	3.1	3.1	3.1	3.0	3.0
충북	3.2	3.2	3.1	3.1	3.1	3.1	3.1	3.1	3.0
충남	4.0	4.0	3.9	3.9	3.9	4.0	4.0	4.0	4.0
전북	4.1	4.0	4.0	3.9	3.8	3.8	3.7	3.7	3.6
전남	4.3	4.2	4.1	4.0	3.9	3.8	3.8	3.7	3.7
경북	5.9	5.8	5.7	5.6	5.6	5.5	5.5	5.4	5.4
경남	6.5	6.4	6.4	6.5	6.5	6.5	6.5	6.4	6.4
제주	1.1	1.1	1.1	1.1	1.1	1.1	1.1	1.1	1.1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추계인구」.

감사의 글

먼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정성으로 지도해주신 권오혁 교수님과 바쁘신 가운데 세심하고 꼼꼼히 심사를 맡아 지도해주신 심성훈 교수님, 김종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사히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난 2년 동안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무한한 영광과 자부심을 갖게 해주신 최홍봉 교수님, 서석홍 교수님, 홍장표 교수님, 류장수 교수님, 장병기 교수님, 하봉찬 교수님의 경제학과 교수님들과, 윤영삼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석사과정 기간 동안 더 큰 배움을 위해 여러모로 배려해주신 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팀원들과 석사과정을 함께 동고동락한 08학번 선배님들, 09학번 동기님들, 10학번 후배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수 있게 용기를 주고 지난 석사과정 시간동안 늘 옆에서 큰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 수현, 세아들 성태, 성준, 성민과 늘 격려와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어머니, 큰형님, 큰형수님과 우리가족들 모두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끝은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어떠한 길이 제 앞에 펼쳐지더라도 저에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이제는 그 길을 헤쳐나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정신으로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며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대학원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을 디딤돌 삼아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다짐하며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10년 1월

최형재